

제 2차 육아선진화 포럼

다문화 사회에서의 육아지원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

· 일시 | 2009. 11. 3(화) 13:30 · 장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제 2차 육아선진화 포럼

다문화 사회에서의 육아지원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

13:30~14:00 등 록

14:00~14:20 개 회 및 인사말

14:20~15:00 주제발표 1: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과제

박경자 한국아동학회

15:00~15:40 주제발표 2: 다문화 사회에서의 영유아교원양성

최민수 미래유아교육학회

15:40~16:00 휴식

16:00~17:30 종합토론

좌장 지성애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문무경 육아정책개발센터

백선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이미정 한국보육학회

이향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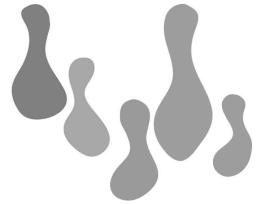
임희옥 한국보육정책학회

정선아 한국유아교육학회 (이름 가나다순)

17:30~18:00 질의응답 및 폐회

— 목 차 —

□ 발표 1.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과제(박경자)	1
□ 지정토론 1	19
백 선 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1
이 향 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25
문 무 경 (육아정책개발센터)	28
□ 발표 2. 다문화 사회에서의 영유아교원양성(최민수)	33
□ 지정토론 2	89
이 미 정 (한국보육학회)	91
임 희 옥 (한국보육정책학회)	97
정 선 아 (한국유아교육학회)	104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과제

- I. 다문화가정의 현황
- II. 다문화 가정지원 정책의 현황
- III. 다문화가정을 위한 육아지원정책
- IV. 다문화가정을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과제

개방화,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와 피부색과 언어,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도 이제 대학 캠퍼스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또한 시민 단체나 정부, 학문 영역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아동학, 가족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사회학, 여성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관련 학회들에서 다문화는 최근에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시대적 흐름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한다고 하는 마스크를 통해서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추석이나 설날 등에 비정규적으로 방영되던 ‘외국인 장기 자랑’ 류에 불과하던 마스크, 특히 TV에서 요즘에는 외국인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영화,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상물이나 각종 서적과 출판물에서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한 다문화 관련 콘텐츠의 폭발적인 증가 역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안경식, 김동광, 김향은, 김희용, 박천웅, 이철호, 장인실, 2008).

다문화주의는 다문화를 보는 철학적, 정치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사단법인 국경 없는 마을은 다문화주의를 “상이한 국적, 체류자격, 인종, 문화적 배경, 성, 연령, 계층적 귀속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공유하며 공존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인 사회·문화·제도·정서적 인프라를 만들어 내기위한 집합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사단법인 국경 없는 마을 리플릿, 2006)으로 정의하였다. 다문화주의는 협의의 제도적인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가 선결된 조건에서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의 특수한 삶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뜻할 수도 있다(오경석 등, 2007, p. 26).

본고에서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 다문화 가정, 특히 국제결혼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한국 사회의 다문화 관련 현황과 이들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 다문화 가정의 육아 지원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과 고려점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다문화 가정의 현황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한국에서 아주 최근의 현상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1990년의 49,507명에서 1995년 269,641명, 2000년 491,324명, 2005년

747,467명, 2006년 910,149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족 자녀, 북한 이주민, 외국 국적 동포의 한국 사회 유입이 증가하면서 1990년에 인구 구성비의 0.11%에 불과하던 체류 외국인 비율은 2006년에는 1.88%로 17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1.8%이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성원은 결혼 이민자, 특히 결혼 이민 여성들이다. 한국 사회의 심각한 저 출산 문제와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라는 이중문제의 해법으로 결혼 이민 여성들이 떠오르면서 결혼 이민자들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 담론과 정책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었다. 결혼이민여성을 중심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이 모색되는 데에는 한국의 가부장적 부계혈통주의도 작용하였다(김혜순, 2006).

1990년대 이래 중국 교포를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은 동남아시아와 중국, 일본, 몽고, 구소련 연방국가 등 아시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어 급증하고 있다. 결혼 이민자 중에는 여성이 88%(10만 2,520명)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4월 현재 116,000명의 외국인 배우자가 있으며, 한국인으로 귀화한 결혼 이민자가 47,000명으로, 모두 124개국에서 16만 여 명의 결혼 이민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 2010년에는 전체 인구의 2.8%, 2020년에는 5%, 2050년에는 9.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장미혜 등, 2008).

국제결혼에 의한 결혼 이민자들은 성에 따라 몇 가지 특성을 보인다. 먼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출신국은 조선족을 포함하여 중국이 가장 많고, 베트남, 일본, 필리핀의 순이었다. 반면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 남성의 경우는 일본이 가장 많고, 중국, 미국, 캐나다, 파키스탄의 순이었다. 또한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간의 결혼에 있어 부부간의 연령차는 줄어들고 있으나(2000년 6.5세, 2006년 4.1세),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간의 결혼에서는 부부간의 연령차가 늘어나고 있다(2000년 6.7세, 2006년 11.5세; 안경식 등, 2008).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농촌의 노총각 수가 크게 늘면서 동남아국 출신의 젊은 여성과의 결혼 비율이 높아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만18세미만 자녀는 총 58,007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6.5%를 차지하며, 2006년도의 25,000명에서 2007년도에는 44,000명으로, 2008년도에는 58,000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6세 이하 아동 수는 2007년도의 26,445명에 비하여 2008년도에는 33,140명으로 6,695명이 증가하여 증가 비율은 57.1%에 달하고 있다(전혜정 등, 2009).

<표 1> 다문화 가정 자녀의 연령별 분포

연령별 구분	다문화 가정 자녀수(B) (2008년)		인구 총조사 인구 (A) (2005년)	인구 총조사 인구 대비 (B/A)
	인구 수	비율		
만 6세 이하	33,140	57.1%	3,595,765	0.92%
만 7세~만 12세	18,691	32.2%	4,030,013	0.46%
만 13세~만 15세	3,672	6.3%	1,992,449	0.18%
만 16세~만 18세	2,504	4.3%	1,830,801	0.14%
계	58,007	100%	11,449,028	0.51%

출처: 행정자치부 2008 거주외국인 실태조사, 전해정 등 2009, p. 1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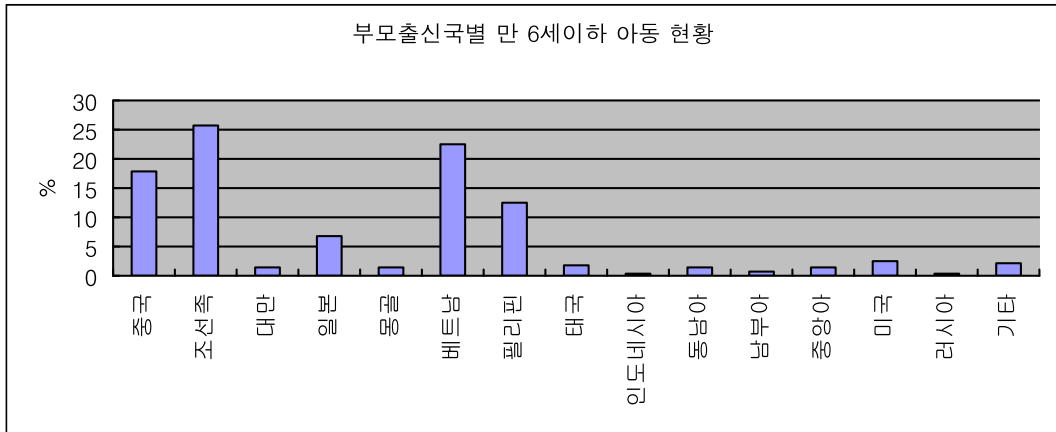
국제결혼 가정 자녀 부모의 국적은 중국(조선족)이 14, 201명으로 32.1%에 달해 가장 많았고, 중국(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의 순이었다.

<표 2> 국제결혼 가정의 배우자 국적에 따른 아동 수

순위	국적	아동 수	비율
1	중국(조선족)	14,201	32.1%
2	중국	7,716	17.4%
3	일본	6,016	13.6%
4	필리핀	6,013	13.6%
5	베트남	5,062	11.4%
6	대만	878	2.0%
7	미국	852	1.9%
8	태국	799	1.8%
9	중앙아시아	550	1.2%
10	몽골	405	0.9%
11	기타	1,766	4.0%
계		44,258	100.0%

출처: 전해정 등(2008).

특히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국적을 살펴보면 조선족과 중국인 부모가 여전히 가장 많으나 베트남과 필리핀 국적 부모의 자녀수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 부모 출신국 별 국제결혼가정 만6세 이하 아동 현황

다문화 가정의 6세 이하 유아의 거주지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17.1%), 서울(11.6%), 전남(9.1%), 경남(9.0%), 경북(8.8%)에서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 시도별 다문화가정의 만6세 이하 아동 현황

(단위: 명,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851	1536	1239	1422	1086	512	601	5673	1405	1607	2184	2634	3003	2906	2991	490
구성비	11.6	4.6	3.7	4.3	3.3	1.5	1.8	17.1	4.2	4.8	6.6	7.9	9.1	8.8	9.0	1.5

출처: 문무경·조혜주(2008).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 부부간의 결혼에 비해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최근 30년간 급속히 증가하여 2003년에 166,617 쌍의 부부가 이혼하여 조이혼율이 3.4로 최고조에 달하였고 2004년 이후에는 차츰 감소하여 2008년은 2.4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내국인 부부간의 결혼에서는 이혼율이 감소한 반면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간의 이혼율이 크게 증가하여, 2008년 이혼 건수 중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11,255건으로 전년의 8,671건보다 2,584건(29.8%) 증가하였다(표 4 참고). 2002년에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총 이혼의 1.2%를 차지하였으나, 2004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08년에는 총 이혼의 9.7%를 차지하였다. 이 중 한국인 부인-외국인 남편의 이혼은 3,293건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하였으나, 한국인 남편-외국인 부인의 이혼은 7,962건으로 전

년보다 39.5%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 결혼 이민자에 의한 다문화 가족의 결혼 적응 문제와 이혼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함을 반영해준다.

<표 4>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단위: 건,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 이혼 건수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 외국인과의 총 이혼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총 이혼 대비 구성비	1.2	1.2	2.4	3.3	4.9	7.0	9.7
증 감 율	3.0	15.4	64.0	26.4	47.1	41.3	29.8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	380	547	1,567	2,382	3,933	5,707	7,962
한국인 처+외국인 남편	1,364	1,465	1,733	1,789	2,203	2,964	3,293

출처: 통계청, 이혼 통계 결과

또한 이혼한 부부 중 한국인 부부는 4년 이하 동거한 부부의 이혼이 점차 감소하고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은 증가하였으나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에서는 동거 4년 이하 부부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혼 가족 중 한국인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은 13.8년인 반면 외국인 배우자와의 동거 기간은 훨씬 짧아 한국인 남편-외국인 부인 부부는 2.7년, 외국인 남편-한국인 부인 부부는 5.6년 동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다양한 집단에서 다문화 가정에 연구가 수행되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박경자와 김송이(2007)는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유아가 부모와의 애착 유형, 자아 지각은 일반 가정 유아들과 별 차이가 없었고 사회적 유능성에 있어서 교사들은 국제결혼가정 유아들, 특히 남아들이 위축된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국제결혼 가정 남아가 교실에서 위축된 행동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전반적으로 사회·정서적으로 적응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현·이승은(2007)의 연구는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의 유아가 부모의 양육태도, 자신의 외모로 인한 정체성 혼란, 가정 내 언어자극 부족으로 인한 언어문제, 또래따돌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표출을 회피하며, 가난한 나라에서 온 어머니와 불쌍한 아이라는 주변의 편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조영달 등(2006)은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 자녀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나 문제는 다소 차이를 보였고 따라서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직이나 고소득층 가정은 자녀교육 문제에 어려움이 없지만 농촌지역, 특히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는 우리말 능력이 낮은 수준이며 심각한 학습 부진과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가정은 8,000여명의 청소년이 학교교육권 밖에 방치되어 있으므로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새터민 가정은 빈곤한 가정환경과 낮은 취학률, 높은 중도 탈락률, 낮은 학교성적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조사한 전해정 등(2008)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일반 아동들에 비해 사회적·정서적 발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순정(2007)은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엄마가 외국인이고,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이나 집단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행동이 위축되고 소극적이며 학교에서의 부적응 현상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부(2005)의 조사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 중 도시의 경우 30.2%, 농촌 지역의 경우 35.4%가 집단 따돌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문무경과 조혜주(2008)의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 영유아는 전반적으로 인지, 언어, 사회발달 수준에 있어서 일반가정의 영유아보다 다소 낮은 편이며, 부모들은 자녀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 있어서 지원받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가정방문 형태의 지원서비스를 가장 선호하며, 한국어와 자국어 공용의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잘 적응하는 경우는 교사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하였다.

II.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정책은 ‘관 주도형 다문화주의’라고 지적될 정도로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중앙 정부는 2006년 4월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대통령 주재로 17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위로 구성된 ‘외국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2007-2008년을 거쳐 법제화 단계에 들어섰다. 다문화 정책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중앙 정부의 부처별 다문화 정책 현황

정부는 2006년 다인종·다문화 사회에 대비하여 “여성결혼 이민자 및 혼혈인·이주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빈부격차별시정위원회, 2006. 4. 26). 이주자들을 위하여 이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마련되긴 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정부나 학계 모두 노동 이주자 보다는 결혼 이민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는 결혼 이민자들이 외국인노동자와 같이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가족을 구성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문화정책 지원 관련 부처들로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여성부의 7개 부처가 있다. 이 중에서 법무부는 과거 ‘출입국관리소’ 조직을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로 확대·개편하여, ‘출입국정책단’과 ‘국적통합정책단’과 10개의 팀을 두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를 보면 외국인 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재한 외국인의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사회적응 지원 시책의 총괄,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다문화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 추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과 다문화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다른 부처들은 특정 분야의 다문화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의 경우에는 조직에서 해당 다문화정책을 전담하는 과나 팀이 존재하는 반면,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여성부의 경우에는 전담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별 업무현황을 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중앙부처 다문화정책 업무의 내용

부처 및 담당부서	업무내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중앙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조 ▪ 다문화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외국인 주민의 정착지원 시책 추진 ▪ 다문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시책 지원 ▪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촉진 방안연구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원 ▪ 외국인 및 노숙자 등에 대한 무료진료 사업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노동자 문화적 지원사업 추진
교육과학기술부 잠재인력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교교육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수립추진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고용 관리 ▪ 외국인력 제도의 전반적 관리 ▪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지도·점검
여성부 권익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폭력 등 피해여성 보호·지원

출처: 장미혜·김혜영·정승화·김효정(2008), p. 235.

2. 지방정부의 다문화정책

지방정부의 다문화정책 지원부서로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공통적으로 자치행정부서와 여성가족부서가 있다. 지역 거주 외국인 집단의 특성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중 광역시와 수도권외의 경우 국제협력부서와 경제·노동 관련 부서가 다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의 경우 농업관련 부서가 다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치행정·행정, 사회복지, 주민지원 부서에서 다문화 업무를 담당한다. 그 외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보건소, 여성정책, 농업 관련 부서에서 다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다문화정책 관련 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외국인지원센터와 같이 지역의 외국인 거주자를 도외전담기관과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이 지역 외국인 지원업무를 겸하는 기존 기관들이 있다. 또 고용지원센터, 교육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같이 중앙부처의 지역 일선기관들도 중요 외 다문화정책의 파트너이다. 지역의 다문화정책의 중요 외 파트너로는 민간기구나 단체들도 있다. 이들 단체들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과 같이 중앙부처가 예산을 지원하고 따라가 센터를 선정하는 경우, 한국어교육지원과 같이 사업단위로 민간기구나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종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 등의 민간 재원을 통해 민간단체가 다문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다문화정책 지원 관련 지방정부부처와 공적기관, 민간 기구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다문화정책 지원 관련 지방정부부처, 공적기관, 민간기구

지방정부	광역 자치단체	자치행정/노동정책/국제협력/문화정책/보건정책/여성정책/외국인지원/농어촌정책
	기초 자치단체	자치행정/사회복지/민원봉사/문화체육/의약·보건/여성·아동
공정 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외국인근로자센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사회복지관/글로벌빌리지센터/외국인지원센터/여성회관/협의회/고용지원센터/국제교류재단/교육청/출입국관리사무소/지방경찰청/공공연구소/국공립대학
민간기구, 단체		이주여성인권센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여성회관(센터)/사회복지관/민간학교/종교조직/교육센터/사회복지법인/이주민여성상담소/외국인노동자상담소/쉼터/문화센터/국제교류센터/YMCA/외국인노동자의 집/다문화가정지원센터/여성단체협의회/민간연구소/사립대학

출처: 행정안전부, 2008; 장미혜 등(2008) p. 239에서 재인용함.

이상과 같은 다문화 정책 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장미혜 등(2008)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중앙 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제도적 문제점 중 먼저 다문화 관련법의 중복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에 관한 주요 법률로는 법무부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보건복지부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다. 그 외에 문화체육관광부도 현재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다문화 정책에 관한 최상위법적 성격을 지니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외국인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재한외국인의 한국 사회 적응과 사회 통합 및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동 법의 내용 중 일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내용과 중복되고 있다. 조정 기능의 미비도 문제로 지적되는데 우리나라 문화 정책에 관한 최상위 계획은 외국인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이 있으며 국무총리실 소속의 외국인정책위원회가 다문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처 간 업무의 중복 문제가 제기된다. 다문화정책에 관한 부처별 업무가 아래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혼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부처가 인권이나 교육 관련 다문화 업무에 관여하고 있고, 법무부가 문화 영역에도 관여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표 7> 다문화정책에 대한 중앙부처별 업무영역

		법무	보건복지	문화	행정	교육	노동	여성
영역	정책일반	▪	▪	▪			▪	
	인권	▪	▪		▪		▪	▪
	교육	▪	▪	▪		▪	▪	
	문화	▪		▪	▪			
	복지	▪	▪		▪			

출처: 장미혜 등(2008), p. 246.

지방 정부의 다문화관련 서비스의 문제점으로는 지원부서 분리에 따른 중앙 부처 행정의 비효율성, 지원부서 유형에 따른 서비스 격차, 사업 주체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한 접근성의 문제와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문제가 제시되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이외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민간기관 지원이 주로 종교단체, 복지관, 이주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이주여성이 민간기관을 이용하는 동안 어린자녀를 보살펴주는 보육서비스가 5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습지도 및 문화체험(34.6%), 아동상담서비스 및 사회정서교육(15.4%), 특성 및 적성교육(7.7%), 리더십, 멘토링, 건강진단 서비스(3.8%) 순으로 나타났다(전혜정, 2008; 장미혜, 2008). 초기 민간기관의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은 여성과 가족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 지원은 부족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 자녀들 수가 증가하고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점차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III. 다문화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을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외국인의 49.1%, 결혼이민자가 16.2%,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결혼이민자들의 절대수가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결혼 이주 여성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대책은 여성 결혼이민자를 우선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2006년에 중앙정부가 다문화 사회 정착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 대상으로 결혼 이주 여성들과 그 가족에 주목하여 인권, 문화, 복지, 가족 등에 관련된 영역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사회 통합을 해서이다.

정부는 국제결혼가정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 164억, 2007년 419억, 2008년 520억, 2009년 617억, 2010년 713억 원으로 5년간 총 2,433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표 8 참고).

<표 8> 국제결혼가정 지원 사업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2,433	164	419	520	617	713
일반 회계	1,639	85	274	350	428	502
기금	363	58	65	73	80	87
지방비	431	21	80	97	109	124

출처: 여성가족부, 2006. 전혜정 등, 2008에서 재인용.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자, 새터민, 입국재외동포 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령기 아동의 수 역시 증가하여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OECD국가들에서는 이민가정 자녀로 급증하고 있는 아동의 교육실패 위험을 줄이고자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정책의 주요 이슈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조망하고 있다.

첫째,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기회 제공에 있어서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로서, 다문화가정은 낮은 접근성(accessibility)과 제한된 비용부담능력(affordability)으로 인하여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기회가 제한되며, 이용기회가 제공되더라도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의 준비가 미흡하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육아지원을 위한 공적 재원 투자가 부족하다. 아동의 발달 및 건강, 가족지원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full-coverage service)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적 재원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아동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넷째, 다문화가정과 육아지원 서비스기관간의 연계가 미흡하다.

다섯째,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과 교수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재정지원 확대, 정책실현성 높은 수혜대상 아동 선정, 다양성에 기초한 대안적 교육과정을 설계, 교사들 다문화교육 강화, 지역사회 자체적인 정책개발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 정부의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정책은 크게 아동 지원 정책과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녀양육기' 지원 계획은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은 부모 지원 사업에 해당한다.

<표 9>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양육기' 지원계획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자녀양육기' 지원 사업 계획](I)

-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08. 5)
- 다문화가족 밀집지역에 다문화 특성화 보육시설 매년 5개소 지정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09. 3)
- 시설 미이용 다문화가족 영유아 대상 보육교사 파견 ('09. 7~)
- ※ 결혼이민여성의 양육능력 향상을 위한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 실시 ('08. 3~)
 - 아동발달주기와 가정환경을 고려한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 지도방법 등 교육
 - '08년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아동양육지도사 1,600명 파견, 10,240가구 지원 예정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초중등학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취학 전 아동 대상의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생애초기 학습능력개발 지원 사업의 일환인 한글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다문화 교육 교수자료 개발을 들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지원은 사업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유치원교육과정 속에서 다문화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IV. 다문화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의 과제

“다문화”가 마치 신드롬처럼 정부 정책, 언론 매체,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말 그대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징후는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기본 입장은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대책, 특히 그들에게 한국어, 한국 음식, 한국 문화를 교육하여 빨리 “한국인화”하여 이주민들을 일방적으로 한국 사회에 통합하고 적응 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등 이주민 집단의 주류 문화 적응 지원에 있어서는 정부의 강력한 주도과 이주민들의 실질적 요구가 부합되어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상호 문화 소통도 다문화 사회 초기 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제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 목표와 방향이 모호하고 추진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한국은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시민 단체 등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러한 다문화 정책이 임시적, 단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논의와 정책이 필요하다. 장미혜 등(2008)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첫째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 교육 필요; 둘째, 생활세계 속에서 다문화 교육을 통해 다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시

민 역량의 강화; 셋째,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일반적 사항, 입국초기-가족형성기, 자녀 출산 및 양육기, 노동시장 (재)진입기의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사회서비스 제공; 넷째, 다양한 배경을 지닌 문화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의 다양성과 공유의 요소를 직접 경험하면서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를 찾는 한편, 다양성을 둘러싼 현실의 과제를 발견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문화 정책의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 부부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이들의 결혼 후 4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에서 이들의 결혼이 부부 모두에게 쉽지 않고 현재의 지원책이 이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결혼 이민 여성들은 문화적 차이, 언어적 어려움, 학대, 남편과의 갈등, 시부모와의 갈등, 우울, 무기력감, 불안 등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설동훈 등(2007)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가구의 53%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새로운 빈곤층으로 대두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급여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고, 사회구성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적 보호를 포함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적 권리를 총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이주 여성들의 사회적 권리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일회적인 것보다는 이들이 급변하는 탈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생애주기별 위험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자율성을 증진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다문화 역량 강화, 다문화 강사 양성, 한국인 배우자 남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도 필요하다.

이제까지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은 주로 여성 이민자와 한국 남성간의 결혼 가정 위주로 수립되었다. 외국인 여성과 한국 남성, 외국인 남성과 한국 여성간의 국제결혼이 배우자들의 국적, 연령, 결혼 이유, 이혼율 등에서 차이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결혼 이민자들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

문무경과 조혜주(2008)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다문화 및 일반가정 영유아의 통합 교육·보육
- 다문화가정 영유아 연령별 맞춤형 지원
- 다문화가정과 영유아 지원에 대한 육아지원기관의 책무성 강화
-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정 부모의 참여 활성화 및 다문화 감수성 증진
- 초등학교 다문화교육과의 연계 강화

이들은 또한 앞으로 다문화 가정의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취학 전 아동이 있는 다문화가정에 '양질'의 육아지원서비스에의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관련 지원 정책과 규정, 지침 등을 마련한다. 현재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프로그램과 활동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개발 및 보급에 앞서 더 근본적으로 아일랜드의 국가지침처럼 육아지원기관마다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하는 원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육아지원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물리적 환경 및 프로그램, 부모와의 연계 등을 점검함에 있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책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다문화배경의 영유아교사 채용을 시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분야의 자격을 소지한 훈련된 다문화배경의 교사인력 풀을 파악하고, 이들을 특히, 초기 기관 적응을 조력할 수 있도록 연수하여 활용한다.

다섯째,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부모지원을 위한 교사 양성교육 및 현직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내 선행연구와 OECD국가의 정책 이슈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교사는 다문화가정 육아지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반해, 실제 상당수의 교사들은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 및 기술이 없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섯째, 외국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 출신국의 언어를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습득할 수 있도록, 스웨덴과 같이 'Mother Tongue Site'를 온라인으로 구축하여 이중 언어 습득의 환경을 제공한다.

일곱째,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무료 건강검진 및 발달검사를 보장하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추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발달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발달상의 문제를 조기에 진단, 발견하여 처치할 수 있도록 한다.

여덟째,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정 육아지원관련 정책 및 서비스들에 대하여 추진 방법, 예산 규모 및 성과 측면 등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범부처간의 지원정책 체계적인 조정 및 협력을 통한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국 다문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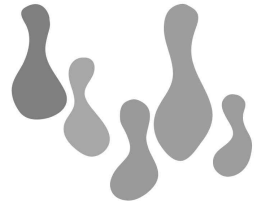
정의 취학 전 아동 상세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을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한국만의 과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경우 다문화 사회를 맞을 준비나 대비가 전무한 상태에서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여 다른 민족과 문화를 포용하는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다. 한국 사회의 단일민족주의와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부장적 순혈주의에 대한 믿음은 다문화 사회 진입의 장벽이 되고 있다. 단일 민족의 전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에서는 '다른' 것은 '틀린' 것으로 단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했다. 또한 국제화, 세계화의 방향에서 우리 보다 '강조나온' 서구 사회로의 out-bound 국제화를 동경하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국가로 부터 이주하는 in-bound 국제화의 대상인 외국인을 홀대하고 '차이'를 '차별'로 귀결 짓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한국 사회에 동화하 보다하는 이제까지의 정책 방향에서 한 걸음 강조나아가 한국인들이 국제화 시대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열린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교육도 필요하다.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이들의 가족을 위한 진정한 육아 지원책이 강구되고 한국의 주류 사회가 이들을 포용하고 이들을 존중하여 다문화 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때 한국 사회가 진입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이선, 김인순, 이창호, 박준규(2008).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문화 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17-06.
- 김혜순(2008).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 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42(2), 36-71.
- 김혜순(2006). 한국의 '다문화 사회' 담론과 결혼 이주 여성: 적응과 통합의 정책 마련을 위한 기본 전제들. 한국사회학회.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 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아위원회.
- 문무경, 조혜주(2008). 다문화가정 육아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문순영(2007).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 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여성 연구, 72(1), 109-142.
- 법무부출입국관리국. 1999-2007. 『출입국관리통계연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박경자, 김송이(2007). 농촌 지역 국제결혼 가정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아동학회지, 28(5), 91-108.
- 설동훈, 김울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 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 방안. 보건복지부.
- 서현, 이승은(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 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안경식, 김동광, 김향은, 김희용, 박천웅, 이철호, 장인실(2008).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 여성가족부(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 대책.
- 오경석, 김희정, 이선옥, 박홍순, 정진현, 정혜실, 양명자, 오현선, 류성환, 이희수, 강희복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올아카데미.
- 장미혜, 김혜영, 정승화, 김효정(200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I):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사회적 실천 현황과 발전 방향(총괄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17-01.
- 전혜정, 민성혜, 이민영, 최혜영, 장수지, 조을순 (2008).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 조사 및 성장 지원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전혜정, 민성혜, 최혜영, 이민영(2009). 다문화가정 영유아 사회·정서 발달 증진 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
- 통계청. 혼인 통계 결과.
- 한경구, 한건수(2007).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이상과 현실: 순혈주의와 문명론적 차별을 넘어서. 한국사회학회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07-7, pp. 71-116.
- 행정자치부(2007).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지역 사회 정착지원 업무 편람.



지정토론

백선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이향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문무경 (육아정책개발센터)

다문화가족 육아지원정책 방안 모색의 접근방법

백 선 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다문화 가족의 육아지원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에 있다. 한국사회에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그 가족의 특성을 이해하고 육아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 좋은 주제의 발표에 감사하며, 육아지원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다.

1. 정책 대상의 범주와 규모

육아지원정책의 대상을 '다문화' 가족으로 통칭하고 있다. 사실 다문화 가족의 범주에는 합법적 범주에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 북한이주민 가족 등이 포함된다. 통계적으로는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로, 2009년 2월 현재 전국에 1,145,351명(법무부 출입국 정보분석팀)이 있다. 이외 불법 체류자 등도 다문화의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다. 발표자는 그 중에서도 결혼이민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후진국가에서 온 신부, 매우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 있다는 편견이 있지만, 실제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 배우자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온 경우, 안정적인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책은 매우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준비, 다문화 가족의 육아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어야 하는지도 분명해야 한다.

또한 정책을 전개할 때 중요한 것은 정책대상의 규모이다. 2008년 현재 만6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는 모두 3만3천명으로 6세미만 아동인구의 0.9%를 차지한다. 적지 않은 수라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들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대상의 규모, 그들의 지역적 분포는 정책 개발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다문화정책이 불과 지난 몇 년 전부터 유행하면서 각 부처가 앞 다투어 정책을 개발하였고, 그 결과의 예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지원센터가 모든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보다 더 많이 보급되었고, 이후 두 센터의 통합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는 정책의 비효율을 보여주는 예이다.

2. 욕구와 사회적 급여

정책은 욕구와 문제의 진단에서 시작한다. OECD 국가에서는 다문화가정 육아지원정책의 이슈를 이용기회의 불평등(접근성, 비용부담), 공적재원투자의 부족, 아동빈곤문제, 가정과 육아지원기관의 연계,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과 교수방식의 필요성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련 정책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자녀양육기 지원계획-다문화가족 아동 보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 특성화 보육시설, 시설 미이용 다문화가족 보육교사 파견-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능력개발지원사업(한글교육)과 교육교수자료 개발을 소개하였다. 다문화사회의 이슈화된 지 얼마 안되는 우리나라로서는 아직 미흡한 측면이 많다. 발표자는 오늘의 발표 주제인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육아지원 정책의 과제'의 제안하는 일을 문무경과 조혜주(2009)의 연구에서 제시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이 점은 아쉬운 점이다. 문무경과 조혜주가 제시한 육아지원 방안은 양질의 접근성과 이용성 보장, 다문화관련 정책, 규정 등 마련, 육아지원기관의 책무성 강화(물리적 환경, 프로그램, 부모연계), 다문화배경 영유아교사 채용, 다문화가정 아동과 부모 지원 위한 교사 양성교육, 이중언어습득 환경 제공, 건강검진과 발달검사, 정부 정책의 종합적 검토, 다문화 가정 현황 파악이다.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육아지원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과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을 명확히 구분한 것은 아니다.

정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다문화 가족이 갖고 있는 육아관련 욕구는 무엇일까? 그 욕구는 다문화 가정이 갖고 있는 언어장벽과 문화적 갈등,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라는 특수성에 기초한 특별한 욕구에 기초한다고 보겠다. 가령 다문화가족 부모의 언어 장벽은 일반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한글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육아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자면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을 다양한 언어로 소개하는 일이 육아지원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자료 발간, 행정기관에서 정보 제공, 다문화 가족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정보제공과 기본적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일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문화적 갈등과 관련된 것이다. 문화적 부적응, 문화적 갈등, 사회적 배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자국의 문화적 특수성이 어느 정도 고착된 부모세대가 갖는 문화적 갈등과 한국에서 태어난 2세대가 갖는 문화적 갈등은 그 취득경로와 양상 등에서 차이가 있다. 영유아기는 연령의 특성상 1.5세대라기 보다는 대개의 경우가 2세대에 해당되

기 때문에 1.5세대의 청소년이 겪는 문화적 갈등과도 또한 다르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영유아기 또는 미래에 겪을 수 있는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자녀양육기 지원계획'은 어느 정도 이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설 미이용 다문화가족에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일은 다문화가족과 보육교사를 만나게 함으로써 육아와 관련된 문화적 갈등을 줄여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이 때 보육교사의 일은 단순히 그 집에서 자녀를 돌봐주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되며 관련 정보 제공, 한국사회의 육아문화에 대한 이해,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훈련 등을 할 수 있는 게이트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문화적 갈등과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나 일반아동들에게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사회적 배제를 줄여나가고 접근성을 높이는 일(특정지역의 다문화특성화보육시설, 보육시설의 다문화 이해도 높이기)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가족이라는 특수성에 기초한 특별한 욕구에 대응하는 일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육료 추가 지원, 빈곤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생활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건강검진 등 지원은 다문화 가족들의 특별한 욕구에 기초한 특별한 대안에 될 수 없다. 보육료 부담, 빈곤, 건강 등의 문제는 다문화 가족의 특별한 욕구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일반적 문제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일반적인 정책 대응(보육료 지원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영유아 보건의료 지원 등)으로 접근하면 되리라 본다. 이들의 특수성에 기초한 특수한 욕구가 무엇이 있는지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해 갈 필요가 있다.

3. 정책의 전달체계와 재정

어떠한 정책이 유행하게 되면 각 정부 부처, 각 단위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책과 프로그램들로 백화점처럼 화려한 반면 과학적이지 않고 즉흥적인 대응으로 인해 정책과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만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다문화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10여개 가량 되는 곳도 있어 서비스 중복이 나타나기도 하고, 공급기관은 있지만 실제 참여하는 수요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공급과 유효수요의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육아지원정책 방안에서 육아지원의 범주를 넘어선 제안을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그들의 주요 정책 또는 프로그램 범주를 넘어서 육아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나타나는 중복과 혼란이다. 물론 누락되는 정책과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다. 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다문화 가족에게 필요한 육아지원 방안에 대해 포

괄적으로 접근하되 정책(육구)의 우선순위,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학문적 정의, 사회적 통념, 정책대상으로서의 범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여, 분명한 정책 대상 범주를 정하여(물론 정책 범주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가변성이 있다)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책은 기존의 사회보장정책과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내국의 정책을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사회보장협정이나 국제적 수준의 권고를 수용해야 할 경우도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외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확대되면 될수록 고려해야할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다. 다문화가족들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우리 사회는 많은 연구와 실천 과제들을 갖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이 향 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도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여러 학문분야나 생활의 주변에서 피부로 느끼는 다문화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포럼을 통해 다문화 가족과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포럼을 통하여 다문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경자 교수님의 원고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현황을 꼼꼼하게 짚어주시니 다른 참고문헌이 없이도 다문화에 대한 구체적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정책의 기초가 '한국인화'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 다문화 정책은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모두 한국에 적응하고 한국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서비스에 집중을 한다면 당연히 많은 문제를 낳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자국의 말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자녀들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출신 어머니를 둔 자녀들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아동들의 언어지체 혹은 언어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아동들은 한국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 아동들이 어머니의 말과 한국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외국인 어머니들은 자국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 모두 알다시피 한국 남편과 시부모 등 한국인 가족들은 어머니가 외국어로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 그 아동이 외국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혹은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우려 때문입니다. 더구나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하는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농산어촌에 살고 있어, 이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어려움은 이러한 편견을 더욱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즉, 외국인 여성이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한국의 문화를 익히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한국인 가족들이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

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경자 교수님께서서는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 증가를 지적하시면서 결혼 이민자에 대한 다문화 가족의 결혼 적응 문제와 이혼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이주민 가정은 상당수가 농산어촌에 존재하다 보니 결혼이주민 가정의 문제는 농산어촌, 빈곤, 다문화라고 하는 삼중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농산어촌의 경우 외부의 문화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가 아직 존재하고 있으며(물론 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농산어촌은 도시보다 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임), 아직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외국인 여성들은 많은 시간의 노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 남성들의 보수적 여성관은 외국 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을 줄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보다 나은 삶을 기대하며 한국에 왔을 외국 여성들은 농산어촌의 빈곤 상황을 접하면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은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에 희망보다는 절망을 안겨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이주민 가정,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 계획은 1) 다문화 가족 아동 보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2) 다문화가족 밀집지역에 다문화 특성화 보육시설 매년 5개소 지정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 3) 시설 미이용 다문화가족 영유아 대상 보육교사 파견 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복지적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의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특성화 보육시설을 지정하는 계획은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으로 규정하고 이들만을 위한 보육시설이나 방과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이라는 관점을 수용하고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지니도록 모든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모든 아동들이 지닐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기관이나 시설의 교사들입니다. 다문화, 인권 등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은 교사들이 이러한 철학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다양한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해도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아동에게 자신의 권리나 다문화에 대한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들에 대한 감수성 향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최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는 이를 강조하여 교사교육

에 치중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여러 모금활동을 하는 기관 등에서는 교사교육에는 그다지 기꺼이 투자하려는 경향을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장기적인 투자를 통한 성과보다는 빠른 결과 및 성과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이나 가족과 관련된 정책에서 단기간의 투자를 통한 결과의 효율성만을 내세우게 된다면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하려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정책의 부재는 참으로 아쉽습니다. 특히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그 아동은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모든 아동은 그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모두 아동으로서의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결혼이주민 가정의 아동들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책은 부족하나마 현재 실행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있고, 사회적 관심도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녀들에 대하여서는 정부나 사회적 관심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정부의 정책이 개선되도록 뜻을 모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문 무 경 (육아정책개발센터)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국제결혼이주자 및 이주노동자의 증가가 가시화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사회적 통합과 이주민의 적응을 위한 논의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 대상 영역 중의 하나로 취학 전 아동을 둔 다문화 가정의 육아부문을 들 수 있으며, 전체 다문화 가정 아동 중 만6세 미만이 거의 6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육아지원정책의 중요성은 자명하다.

발표자께서는 다문화 가족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제반 지원정책과 문제점을 검토, 제시하였으며, 육아지원과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토론자는 다문화 가정의 육아지원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발표원고 내용 순서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다문화 가족 관련 현황

먼저 발표자께서는 다문화 가족 관련 현황을 다각도로 정리, 분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다문화 가정 육아지원 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추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다문화 가족 아동의 만6세 미만 영유아 수는 전체 다문화 가족 아동 58,000명 중 57.1% 차지하므로 다른 연령대의 아동에 비하여 보다 획기적인 정부의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의 높은 이혼율과 이혼 시기가 결혼생활 평균 2.7년임을 고려할 때,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는 애착 형성 등 안정적인 보호자가 필요한 만2세 미만의 영아기에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의 결손가정에서 성장할 잠재적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셋째, 본 발표원고에서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유치원 취원율과 보육시설 이용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점이다. 2007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다문화 교수자료 개발의 일환으로 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제한적이다. 2009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가 보육실태조사

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으나, 이 또한 전수조사가 아니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매 3년마다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현황파악을 넘어서 다문화 가정과 그 영유아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비, 보육료 지원 대상 비율, 가정 소득 수준, 주거지역 및 환경을 비롯하여, 이용하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의 질적 수준과 관련한 조사가 시급히 실시되어야 한다.

2.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발표자께서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정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으로 관련법의 중복, 조정기능 미비 및 부처간의 업무 중복을,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지원부서 분리에 따른 중앙부처 행정의 비효율성, 지원부서 유형에 따른 서비스 격차, 사업주체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한 접근성의 문제, 다양한 이슈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부족을 지적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관주도적인 다문화주의'로서 정부의 강력한 주도와 이주민의 실질적인 요구가 맞물려 '빨리 한국인화하기'의 동화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는 있으나, 정책의 방향과 목표가 모호하며 추진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최근에 부각되어 논의의 깊이가 제한적임을 반영하며, 지원정책 수립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이념적 지향점을 정립해야 할 시점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동화주의, 문화다원주의, 다문화주의 가운데, 아니면 또 다른 대안적 패러다임을 창출하여 정책노선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결정은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녀양육기 해당 지원 사업(2008. 5월, 10월)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개발지원 사업의 일환인 한글 교육과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008), 희망교육사 파견사업(2008-현재), 다문화교육 교수자료 개발 및 보급(2007)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과 관점이 좀 더 피력되었으면 하며, 발표자께서 생각하는 중점 정책과제 및 추진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더 들을 수 있으면 한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의 육아지원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및 기구간의 역할 분담 및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가장 추진력이 뛰어날 수 있으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제한적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경우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의 정책 추진에 유리하나, 오히려 다문화 가

정에 대한 지역의 편견이 더 심각할 수 있다. 민간단체 및 기구는 다문화 가정의 요구를 민감하게 수용할 수 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추진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낮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감안하여 정책사업 추진의 인적, 물적 자원의 중복과 낭비를 피하고 조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요구된다.

3. 다문화 가정 육아지원 정책 과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육아지원 정책으로 첫째, 육아지원기관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용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일을 들 수 있다. 상당수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가 우수한 육아지원기관보다 그렇지 못한 육아지원기관에 다닐 가능성이 큰 것은 우수한 기관에의 접근성이 낮고, 비용부담이 높기 때문이므로 정부차원에서 양질의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낮은 수준의 발달적 특징 및 사회부적응 등의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부모에 대한 편견을 재고해 보아야 한다. 흔히 부모는 자녀의 첫 교사이며, 자녀에 대하여 가장 전문가라고 말하는 통념이 다문화 가정의 부모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아마도 다문화 가정 부모는 대부분 교육수준이 낮으므로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별로 질적으로 수준 높은 기여를 할 수 없다는 '편견'이 통상적일 것이다.

또한 자녀양육에 대한 다문화 가정 부모의 가치관 등에 있어서 개인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다문화 가정 부모는 교사가 자녀와의 의사소통시 자국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고마워하는 반면, 어떤 부모는 항상 공식적인 언어로 대화해 주기를 원한다. 많은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정과 '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육아지원기관을 선택하므로, 육아지원기관의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정 문화와 '같은' 내지 '유사한' 성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관점을 토대로 계획, 실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일반적인 선입견에서 벗어나 다문화 가정의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가 어떻게 자라나길 바라며, 육아지원기관에서 어떻게 생활하기를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육아지원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물리적 환경 및 프로그램, 부모와의 연계 등을 점검함에 있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문무경·조혜주(2008)의 연구에 의하면,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에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지도실태 및 요구에 차이가 있다. 즉, 유치원이 보육시설에 비하여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의 측면에서 나으며, 특히 일반가정 아동 대

상의 다문화교육을 더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시설에서 유치원보다 부모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구하고자 노력하고, 가정보육시설의 경우는 다문화적 환경이 미비하고 다문화관련 연수 경험 및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 설립유형, 지역별로 육아지원기관에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아울러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 있는 다문화교육의 요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육아지원기관에서 명시된 대로 실제로 실행하며, 또한 평가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실제 상당수의 교사들은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 및 기술이 없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보고하므로 이를 위해 교사 양성교육 및 현직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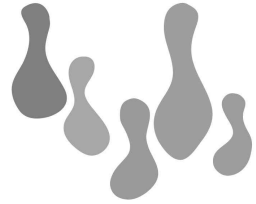
넷째, 다문화가정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2006-2010년 5년간 약 2,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재원 확보 못지않게 배분, 즉 어디에 얼마나 사용하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예산을 통합적으로 한 곳에 지원하여 자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사료되며, 예산 투입 대비 성과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및 실행이 필요하다. 일부 다문화 가정에서는 지원정책에 대한 '쇼팽'이 가능한 수준에 이른 반면, 일부 필요한 가정에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원수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적 올리기 식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정부지원 예산투입의 효율성에 대한 반성이 요구된다.

다섯째, 결혼 후 4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현재의 지원정책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가정의 절반가량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층으로 나타나 새로운 빈곤층으로 대두할 위험이 있음(설동훈, 2007)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은 단순히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경제적 빈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생계해결을 위한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의 육아지원은 자녀양육법 교육 등과 더불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등, 그야말로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발표자께서는 열악한 국가로부터 이주해 온 외국인들을 홀대하여, '차이'를 '차별'로 귀결 짓는 오류와 기존의 동화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열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합의와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 육아지원과 관련하여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며, 과연 '포용'과 '존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의 한 보고서에는 민주사회에서 모든 수준의 교육은 '나 자신의 복지는 다른 사람의 복지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는 것이며, 민주적 학

교는 학생들이 민주시민과 인권의 개념을 잘 알도록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모든 학생의 권리와 의견이 수렴되고 존중되도록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UNESCO, Delors Report, 1996). 이는 취학 전 영유아를 돌보고 가르치는 육아지원기관에 가장 먼저 해당하는 신념일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영유아교원양성

- I. 서론
- II. 통일한국의 영유아교원교육 제도 및 정책방향 모색
- III. 북한이탈 인적자원의 영유아교육현황 취업과 재교육방안
- IV. 남북한 영유아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과 교류방안 모색
- V. 통일한국의 영유아교원 교육제도 및 정책방향 설문조사
- VI. 결론

1.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문제의 제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표명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에 나타난 '3000구상'의 추진목표는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임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하면서 남북경협을 포괄범위를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복지 5대 분야를 포함하여 외연을 확장한다고 밝히고 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8; 오일환, 2008, 조용남, 200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08)에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중 통일교육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는 '남북간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 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이해', '통일의 필요성 등 통일의식 제고', '북한 실상 소개', '정부의 통일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방안(오일환, 2008)에서는 다원화된 시민사회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사이버 통일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 민주평통협의회와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을 연계한 통일교육의 체계화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통일교육 교재 및 교수법을 개발하고, 다양한 통일교육 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의 통일교육 방향은 정부의 통치이념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연구의 시각도 그러한 틀 속에서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으로 변화되어 왔다. 1990년 이후부터는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의 관점도 북한 사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내재적 관점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최근에는 통일교육의 기본적인 방향도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교육,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2008년에 개정된 제7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북한에 대한 화해와 이해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변화되었고, 통일 이후의 삶에 필요한 기초교육이 유아기 때부터 준비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교사들은 통일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 범주 및 활동에 대한 자

료들이 미흡하여 통일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남북한의 모든 교사들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영유아 교원교육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갑작스러운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데올로기에 의해 심리적 충격을 당할 북한의 영유아교사와 교육 현장의 피해와 충격을 최소화 하고 교육의 본연의 자리매김이 가능하도록 점진적인 대안으로 교사 훈련과 교육 현장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북한 사회가 개방될 때에 바람직한 유아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사전 작업(유아교육 리더 발굴 훈련,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유아교육 현직 교사 재훈련 과정, 영유아교육과정과 전문 교수요원 확충 등)을 영유아교육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이 최대한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북한 거주하고 있는 현직 교사와 부모들도 수용할 수 있는 인간 본연적인 영유아교육과정의 적용을 위해서 탈북자 교사와 새터민 교사 지망생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이 한국 유아교육 현장에서 적응하는 과정을 연구하고 그들과 함께 미래를 대비해 나갈 수 있는 통일시대의 교원교육 제도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2009년 1월까지 국내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수는 1만 5천명이 넘어섰다. 이 가운데 여성이 66%를 차지하고 20-30대 젊은이들이 절반을 넘는다. 지역별로는 서울(34%), 경기(24%), 인천(9%) 등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수도권 지역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취득한 기술만으로는 취업이 힘들고, 상대적 빈곤감이나 언어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적응에 실패하거나 삶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로 새로 들어온 새터민들은 하나원에서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을 위하여 12주의 기초교육을 받고 각 지역으로 배정되어 정착해 나간다. 하나센터는 하나원의 기초교육을 보완하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들이 새터민들의 실제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설되었다. 경기도제2청에서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은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정착 당사자들은 효율적으로 교육 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새터민에 대한 맞춤형 취업을 위해 힘쓰고 있다(조선일보, 2009.06.08, 조선일보, 2009.07.29).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한국의 영유아교원 양성과 재교육을 위한 교육제도 및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수립하였다. 첫째, 통일한국의 영유아 교원교육 제도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둘째, 북한이탈 인적자원의 영유아교육 전문가 육성 및 취업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남북한 영유아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과 상호교류 기회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2) 선행연구

유아통일교육에 관련된 선행연구들로는 남북한 유아교육의 비교연구(이경화, 1996; 이원영, 최민수, 1998; 지성애, 김숙자, 1999; 최민수, 1993), 통일교육의 실태연구(김지영, 1996), 통일교육의 내용연구(김숙자, 2001; 지성애, 김숙자, 1998; 최민수, 김숙자, 지성애, 심정화, 2002), 통일교육의 방안모색 연구(박문갑, 2000; 서규선, 윤기영, 1995; 윤기영, 이미숙, 1995), 통일교육 현장 적용연구(최민수, 박혜숙, 2001; 이원영, 이태영, 이경민, 2001; 최민수, 김숙자, 지성애, 심정화, 2002; 김숙자, 지성애, 최민수, 서성미, 2003) 등이 이루어져 왔다.

통일에 대비한 교육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한국교육개발원(1993), 최영표, 한말길, 홍영란, 박재완(1993), 이은영(1997)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북한의 교원양성 제도 및 정책 연구로는 성영혜, 김수정(2001), 양옥승, 오미경(1995), 전정태(1996; 1997), 차우규(2003), 이시애(2006) 등의 연구 이루어 졌다. 또한 남북한 교육 협력·교류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교육개발원(2007), 윤종혁(2007), 신호숙(2007)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통일한국 시대 영유아 교원교육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매우 미흡하며, 영유아 교원교육 및 재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유아통일교육의 연구동향에 대한 한 연구(김숙자, 윤기영, 최민수, 2004)에서는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섯 가지 측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체계적인 유아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유아통일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된 유아통일교육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실효성 높은 유아통일교육 현장적용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유아통일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동향 분석에서 제시된 유아통일교육의 발전방향에 따른 실천을 위해서는 통일한국의 모든 교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제도 및 정책 방향을 모색되어야 한다.

영유아 교원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텐츠 범주의 준거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윤기영, 이미숙(1995)는 인간교육,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내용을 통하여 다양한 활동형태로 접근하였고, 이원영, 이태영, 이경민(2001)는 유아통일교육 내용체계를 자유민주주의 신념의 형성, 동질성 회복, 이질성 포용력 함양, 평화공존과 남북화해협력, 민주시민교육으로 구분하여 5개 생활영역 내용체계에 따라 활동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최민수, 김숙자, 지성애(2002)는 유아통일교육 내용요소를 민주시민교육 함양 교육, 다문화 반편견 교육, 평화교육, 민족공동체의식 증진 교육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각각의 활동내용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민족공동체의식 증진 교육에서는 북한 사

회 이해교육을 통하여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전통문화 교육과 자연환경 친화교육을 통하여 같음을 이해할 수 있는 하위 범주로 활동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독일의 통일교육을 다룬 한 연구(김창완, 양금희, 윤재홍, 2002)에서는 통일전 서독의 학교통일교육의 주요 내용 범주인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 민족교육 등을 중심으로 구분하였고, 동독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이념 주입교육에 주력해 왔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통일독일 이후에는 서독의 통일교육을 기반으로 통일 후에 제기된 심각한 부적응과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민주적 방식과 평화적 해결능력을 키워주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숙자, 윤기영, 최민수, 2004). 따라서 향후 유아 통일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개발 방향의 준거에는 지구촌 사회에 적절한 보편적 가치(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다문화·반편견 교육, 국제이해교육)와 한반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치(민족공동체의식 증진 교육)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필요성

광복이후 남북한 주민들은 이질화된 정치체계에 각각 적응하며 살아왔다. 통일한국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상생과 공영'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질적인 '다름' 보다는 서로의 '같음'을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의식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다양한 삶의 방식과 다른 문화에서 비롯되는 차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서로의 조화와 통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진정한 상생과 공영이다.

'같음'에서 시작할 수 있는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조상들이 5천년 동안 함께 계승해 온 전통문화를 함께 체험함으로써 민족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고, 이러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통하여 유아기 때부터 북한 사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도록 하여 지난 50년 이상 이질화된 문화의 간격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름'에서 시작할 수 있는 통일교육은 서로 다른 다양한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반편견 교육,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과 평화교육 등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특성은 유아기 때부터 실시되어야 평생 동안의 의식과 태도로 정착되는 데 효과적이다.

남북한의 다름을 수용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현재의 이질적인 현상, 다양한 편견, 고정관념 등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남을 시도하는 교수모형으로 반편견 교육과정 접근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김영옥, 1998; 이원영, 최민수, 1998; 최민수, 2000, 김숙자, 윤기영, 최민수, 2004). 1단계는 서로 만나서 다름을 알고 알리는 노출단계이고, 2단계는 서로의 통합 가능성을 인식하고 인정함으로써 편안함을 느끼는 단계이며, 3단

계는 다름 속에서 서로의 같음을 발견하고 느껴보는 감정이입 단계이고, 4단계는 서로의 통합을 모색하고 실천방향을 찾는 활성화 단계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서로의 이질적인 현상 등을 동질화 해나갈 수 있으며, 남북한 유아통일교육의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통일시대 영유아 교원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이데올로기의 이념 하에서 유아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는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개방이 되었을 때 현재 이데올로기가 그 국가의 확고한 이념이 되지 못하고 온 국민과 교사들이 방황하는 정신적 아노미 현상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된다. 그 때를 대비하여 유아교사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준비를 해 나가지 못하면 자라나는 유아들과 그 사회가 당할 위기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그 틈에 교육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비교육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이웃해 있는 한민족으로서 그 사회를 위해 한국의 유아교육계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적절한 대상자들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후원하며 대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긴박한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남한의 영유아 교원양성은 이원화된 법체계에 따르고 있다. 하나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양성이고, 다른 하나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사의 양성이다. 현재 보육교사의 양성은 4년, 3년, 2년제 대학에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1년제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치원 교사는 기본적으로 2년제, 3년제, 4년제 대학에서 필요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일원화된 어린이보육교양법에 따라 유치원 교양원과 탁아소 보육원을 양성하고 있다. 유치원 교양원의 양성은 기본적으로 3년제 교원대학에서 배출하나 농어촌에서는 교사가 부족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1년제 유치원 교양원 단기양성소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탁아소 보육원의 양성은 3개월, 6개월 과정의 보육전문학교, 고등전문학교 등에서 양성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에서는 다양한 영유아 교사의 양성기간을 고려하여 양성 및 재교육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초·중·고 교사와 마찬가지로 영유아교사의 기본 학력을 4년제 학사학위 수준으로 규정하고, 현직 교사의 재교육을 위해서는 1-3년제 교육과정을 편입을 통한 정규 양성과정, 시간제 교육, 사이버 교육, 야간제, 계절제, 학점은행제, 방송통신 등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재교육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설과 비용을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유아교육법, 2008; 영유아보육법, 2008; 어린이보육교양법, 1976; 나정, 장명림, 박은실, 1998; 이원영, 최민수, 1998).

2. 연구의 내용 및 절차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과 절차를 통하여 통일한국의 영유아 교원교육 제도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통일한국의 영유아 교원교육 제도 및 정책 방향 모색

1단계 : 문헌 분석을 통하여 통일한국의 영유아 교원교육을 위한 제도 및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남북한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교원교육과 관련이 있는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필요한 내용 요소들을 추출하여 통일한국의 남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영유아 교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원양성 교육 및 재교육 제도 및 정책의 방안을 모색한다. 기본적인 정책의 접근 방법은 같음에서 다름을 수용할 수 있고, 다름에서 같음을 공유할 수 있는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1차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통일한국 시대의 영유아교원 양성 및 재교육에 관한 제도,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논의 과정을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

2단계 : 영유아 교육 관련 전문가 및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 대상으로는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원장 및 시설장, 유치원 및 보육시설 학부모, 장학사(행정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 교원양성 및 재교육 방안,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 교원양성 방안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다. 통일한국의 영유아 교원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교원연수 제도 및 정책은 물론 교원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통일한국에 필요한 자격교육, 직무교육, 자격증 교환교육, 승급교육, 특별교육 등의 다양한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영유아 교원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건강, 위생, 영양, 안전에 대한 건강생활 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협력, 존중, 배려, 조망수용, 화목 등의 사회생활 요소, 다양한 전통문화 예술을 기본으로 하는 표현생활 요소, 기초적인 언어능력 개발은 물론 언어문화 이질화 해소를 위한 언어생활 요소, 독창성, 탐구력,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탐구생활 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영유아 교원 교육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어릴 때부터 양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한국 사회의 독특한 가치를 함께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 요소를 조화롭게 반영해야 한다. 즉 민주시민 교육, 민족공동체 의식 교육, 전통문화 교육, 다문화·반편견 교육, 다양한 체험활동 교육, 기본생활습관 교육, 지역사회 및 부모교육, 영유아 교원평가, 유아교육기관 시설평가 등의 교육적 요소를 고려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유용한 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교원교육 및 재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어린이집, 유치원 취업 가능 자격증 부여 방안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에서 각기 다른 이데올로기에 영향 하에 성장하고 교육받은 세대들이 공통의 기반을 발견하고 차이점을 인정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개방이나 통일 이후의 북한 지역의 유아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특정 정치이념, 종교적 언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협력의 터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영유아 교육현장 취업과 재교육 방안 모색

첫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통일한국에 필요한 영유아 교육 분야의 리더를 발굴 육성하여 취업 및 재교육 방안을 모색한다. 탈북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인적자원을 통일시대의 유능한 전문인으로 양성하는 동시에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다. 북한 유아교육을 경험한 탈북 교사들이 한국 유치원 교육 현장에 서서히 참여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내면적 갈등과 문제 해결 과정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을 가르치려 하거나 우리 교육의 장점만을 수용하도록 하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그들이 서서히 우리 교육의 장점을 익히면서 자신들의 가치관과 이념을 점차 해소해 가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이런 경험과 과정은 유아교육 전문가들에게 앞으로의 연구와 지원과 교육과정 개발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사례가 되고 그들의 조언과 의견을 참고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앞으로 통일한국의 북한 유아교육 전문가와 유아교사들의 연결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주체이다. 또한 이들 스스로가 겪은 경험과 회복 과정이 앞으로 경험할 북한 교사들의 선행적 사례가 될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 교사의 리더십 향상 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북한 유아교육을 위한 부작용의 최소화와 본질적인 유아교육 손쉽게 정착하도록 돕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탈북 현직 유아교사들에게 대학원 진학과 연구 참여 등을 장려하여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은 북한과 남한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 이러한 일을 위해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 중 영유아 교사 지원자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북한에서 자라 한국에 와서 진학을 할 청소년 중에 영유아 교사 희망자를 선정하여 전폭적으로 영유아 교원양성 대학에서 최대한 잠재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지지하는 체계를 구축하

여 이념으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지를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같은 고민을 가진 북한 교사들을 전폭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잠재적인 인적자원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넷째, 북한이탈 청소년 예비 영유아 교사 취업과 교육 현장 활동을 지원한다. 탈북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교사자격을 취득하도록 관찰과 실습 기관 선정과 활동을 의도적으로 돕는 멘토를 두고 조력하여 교원자격 취득 후에 교육기관에 취업하도록 도와서 본질적인 유아교육의 장점을 몸으로 익히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모델 교사로 양성할 수 있는 지원활동이 있어야 한다.

3) 남북한 영유아 교육현장 지원과 교원교류 확대 방안 모색

첫째, 북한 영유아 교육 현장을 지원한다. 인도적 차원에서 복지와 교육 자료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 개방 전에도 북한 유아교육자들로 하여금 남한의 유아교육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물질 지원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 영유아 교원의 탐방 교류를 확대한다.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이해의 공감대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유아교육 기관을 관찰 할 수 있는 상호 방문 기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영유아 교육을 위한 남북한 전문가들의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 변화하는 정치적 상황을 대비한 영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합의하여 진행하는 발전적인 연구 풍토와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 위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단계이다.

통일한국의 영유아 교원교육 제도 및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결과는 갑작스러운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지역이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재구성 과정을 통하여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영유아 교원양성 및 현직 교원의 재교육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 제공, 영유아 관련 행정가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통일한국 시대의 영유아와 교사를 위한 교원 교육 및 재교육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통일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신문이나 방송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사회통일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 북한이해 교육, 교사양성교육, 교사재교육, 학부모 교육, 다문화·반편견 교육 등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이미 남한에는 보편화 단계에 접어든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매체나 방송 통신의 이용을 북한 지역에 빠르게 보급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비용으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교육방식을 도입할 때 매우 유용한 기초적인 콘텐츠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3. 통일한국에 대한 용어정의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일한국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통일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갑작스런 한 순간의 통일을 전제한 통일한국을 고려할 수 있다. 통일 독일의 경우와 같은 갑작스런 한 순간의 통일한국 시대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북한을 이탈하는 난민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혼란과 후유증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시나리오를 대비한 통일교육 제도와 정책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상황을 전제한 통일한국을 고려할 수 있다. 점진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서서히 통일해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상황 전개 과정을 통일한국 시대로 간주하는 통일교육 제도와 정책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논의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일한국'에 대한 정의는 상술한 두 가지 관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기본적인 연구의 방향은 서서히 통일해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의미하는 통일한국은 물론 '갑작스런 한 순간의 통일'의 의미하는 통일한국에 필요한 통일교육 제도 및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II. 통일한국의 영유아 교원교육 제도 및 정책 방향 모색

통일한국의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은 영유아 교원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에 대한 의미와 마찬가지로 교원의 질은 교원교육의 질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질 높은 영유아 교원의 양성과 재교육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에 적합한 영유아교원 양성 및 재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통일한국의 영유아교원 양성제도 및 정책

현재 남한의 영유아교원 양성과 재교육은 기본적으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원의 양성 및 재교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교원의 양성 및 재교육 과정으로 2원화된 체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1원화된 '어린이보육교양법'에 따라 유치원 교양원의 양성 및 재교육, 탁아소 보육원 양성 및 재교육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유아교육법, 2009; 영유아보육법, 2009; 어린이보육교양법, 1976). 이를 바탕으로 모색한 통일한국의 유치원교원 양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통일한국의 유치원교원 양성

(1) 통일한국의 유치원교원 양성제도 및 정책 방향

통일한국의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은 교사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3년제, 4년제 과정을 근간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남한의 유치원 교사의 양성은 대부분 3년제, 4년제 대학에서 양성하고 있고, 북한에서도 기본적으로는 3년제 교원대학에서 양성하면서 예외적으로 1년제 교양원양성소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 시대에는 현재 북한의 3년제 교원대학을 4년제 양성과정으로 전환하고, 현재 1년제 교양원양성소에 대한 엄격한 시설과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과정을 통하여 3년제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 시대의 유치원 교사의 양성은 기본적으로 학사학위 이상으로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유치원 교사의 4년제 학사취득은 세 가지 과정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첫째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고, 둘째는 3년제 대학의 전공심과정을 개설하여 야간과정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며, 셋째는 4년제 대학교에 2학년 3학년 4학년 과정으로 정원 외 편입하여 주간, 야간, 계절제, 주말제, 학점은행제, 사이버, 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그동안 남북한에서 1년제, 2년제, 3년제 양성과정을 통하여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상술한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교육받은 연수에 비례하여 호봉에 반영하는 제도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시적으로 교육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및 정책을 통하여 유치원 교사의 적극적인 학사학위 취득과정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2) 통일한국의 유치원교원 양성교육 프로그램 방향

남한의 유치원교사 양성과정의 프로그램은 크게 교양과목, 교직과목, 전공과정, 실습과목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북한의 교양원 양성과정의 프로그램은 정치사상과목, 교양과목, 전공과목, 실습과목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북한의 양성과정에서는 정치사상과목이 상당한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달단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유아들은 정치사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러한 과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과목들은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과목명으로 보면 유사한 측면이 많다.

통일한국의 유치원교원 양성교육 프로그램은 글로벌 시대의 민주시민 양성에 필요한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은 물론 남북한의 주민들이 함께 통합하고 융합해 나갈 수 있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유치원 교사의 양성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치원 교육에 필요한 보편적인 전공과목을 기본으로 하여 글로벌 시대의 인간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양과목, 일반선택과목, 교직과목, 실습과목 등으로 유치원 교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다양한 교과목들의 내용에는 민주시민교육, 남북한이해교육, 평화교육, 민족공동체의식 증진교육, 전통문화 교육, 기본생활습관 교육, 다양한 체험교육, 다문화교육, 반편견교육, 교원평가, 유치원 평가 등의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통일한국의 보육교사 양성

현재 남북한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육시설 보육교사(보육원) 양성제도 및 정책과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모색해 본 통일한국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양성 제도 및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통일한국의 보육교사 양성제도 및 정책

통일한국 보육교사의 양성과정은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2년제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남한의 보육교사 양성은 1년제 보육교사교육원, 2년제 보육과, 영유아보육과, 아동복지과, 사회복지과 등, 3년제 보육과,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등, 4년제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영유아보육과, 사회복지과, 간호학과 등에서 양성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보육원학교에서 운영하는 3개월, 6개월 정도의 양성과정을 통하여 보육원을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 시대에는 현재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북한과 남한의 다양한 양성기간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 2년제 전문학사 이상의 보육교사 양성과정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육교사교육원, 북한의 보육원학교 등을 대상으로 기관의 시설·설비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2년제 보육교사 양성교육기관으로 전환하여 전문학사를 수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육교사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은 세 가지 과정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첫째는 2년제, 3년제, 4년제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의 1년제 보육교사교육원을 2년제 보육교사 양성교육기관으로 전환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며, 셋째는 2년제, 3년제, 4년제 대학으로 정원 외 편입하여 이미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여 편입학년을 정하고, 학습방법은 주간, 야간, 계절제, 주말제, 학점운영제, 사이버, 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

다. 그동안 남북한에서 3개월, 6개월, 1년제 보육교사(보육원) 양성과정을 통하여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상술한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면 교육받은 연수에 비례하여 호봉에 반영하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한시적으로 교육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 및 정책을 통하여 보육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2) 통일한국의 유치원교원 양성교육 프로그램 방향

남한의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프로그램의 과목들은 크게 보육기초과목, 발달 및 지도과목, 영유아교육과목, 건강 영양 및 안전과목,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과목, 보육실습과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의 교양원 양성과정의 프로그램은 보육학, 위생학, 영양학, 생리학, 아동심리학을 비롯한 보육교양에 필요한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유치원 교양원 양성과정의 과목을 볼 때 정치사상과목, 실습과목 등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영유아들의 발달단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유아들은 정치사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러한 과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보육교사(보육원)의 양성과정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남북한 모두 보육교사 양성과정에는 교직과목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그밖에 다른 과목들은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과목명으로 보면 유사한 측면이 많다.

통일한국의 보육교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은 글로벌 시대의 민주시민 양성에 필요한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은 물론 남북한의 영유아는 물론 학부모들이 함께 통합하고 융합해 나갈 수 있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교육에 필요한 교직과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육교사 양성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실습과목 등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다양한 교과목들의 내용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보편적인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기본으로 하여 민주시민교육, 남북한이해교육, 평화교육, 민족공동체의식 증진교육, 전통문화 교육, 기본생활습관 교육, 다양한 체험활동 교육, 교원평가, 보육시설평가, 다문화교육, 반편견교육 등의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통일한국의 영유아교원 재교육 제도 및 정책

1) 통일한국의 유치원교원 재교육 방향

(1) 통일한국의 유치원교원 재교육 제도 및 정책

통일한국의 유치원교원에 대한 재교육제도 및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현재 남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유치원 교원의 양성기간을 고려하여 일정한 질적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조정하는 소위 호봉조정 연수 과정이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년제, 2년제, 3년제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을 통하여 교사가 된 현직교사들에게는 2년제, 3년제,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 야간제, 주간제, 주말제, 계절제, 사이버 강좌, 학점은행제, 방송통신 등 다양한 교육방법 중에서 자신의 실정 가장 적합한 재교육 방법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교육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교사의 질적 수준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접근방식은 정부의 지원으로 재교육 기간에 해당되는 호봉을 상향조정하여 현직교사의 자율적인 노력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와 정책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밖의 유치원 교사 재교육을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자기연수, 멘토링연수, 자율연수 등의 다양한 재교육 제도 및 정책을 재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통일한국의 유치원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방향

유치원 교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은 재교육의 대상과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격연수 과정에서는 3년 경력, 6년 경력, 9년 경력 이상의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유치원 정교사(1급), 원감, 원장 자격연수에서는 유치원 교원의 발달단계에 따른 역할과 기능에 적합한 한 한 강조되고,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이론과 실재를 포함해되고, 새롭 과정에서는 유아교육 리더에게 필요한 한 과 기 역할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치원 교원의 재교육 프로그램에는 교사의 전문성역할높일기능에 적합한 을 포함하여 민주시민교육, 남북한이해교육, 평화교육, 민족공동체의식 증진교육, 기본생활습관지도 다양한 체험활동교육, 다문화교육, 반편견교육, 교원평가, 유치원평가 등의 요소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통일한국의 보육교사 재교육

남한의 보육교사 재교육은 기본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은 '어린이보육교양법'에 따라 탁아소 보육원 재교육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2009; 어린이보육교양법, 1976). 이를 기초하여 모색해 본 통일한국의 보육교사 재교육 제도 및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통일한국의 보육교사 재교육 제도 및 정책

통일한국의 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제도 및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현재 남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육교사의 양성기간을 고려하여 일정한 질적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육교사의 자격을 조정하는 성격을 지니는 일명 호봉조정연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3개월, 1년제, 2년제, 3년제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을 통하여 교사가 된 현직교사들에게는 2년제, 3년제,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 야간제, 주간제, 주말제, 계절제, 사이버 강좌, 학점은행제, 방송통신 등 다양한 교육방법 중에서 자신의 실정 가장 적합한 재교육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교육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교사의 질적 수준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접근방식은 정부의 지원으로 재교육 기간에 해당되는 호봉을 상향조정하여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밖의 유치원 교사 재교육을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자기연수, 멘토링연수, 자율연수 등의 다양한 재교육 제도 및 정책을 재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통일한국의 보육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통일한국의 보육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은 보수교육, 승급교육, 자기교육 등의 성격에 따라 초점이 다르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승급교육을 위한 재교육 연수과정에서는 2급, 1급, 시설장 연수의 대상에 따라 보육교사로서의 발달단계에 따른 역할과 기능에 적합한 내용이 강조되어야 하고,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이론과 실체를 포함해야 하며, 또한 글로벌 시대의 유아교육 리더에게 필요한 내용과 기술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한국 시대의 보육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민주시민교육, 남북한이해교육, 평화교육, 민족공동체 의식 증진교육, 다문화교육, 반편견교육 등의 요소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III. 북한이탈 인적자원의 영유아 교육현장 취업과 재교육 방안

북한이탈 인적자원에 대한 영유아 교육현장의 취업과 재교육은 그들이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당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과정은 향후 통일한국 시대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교육 전문가들에게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이탈 성인 인적자원의 영유아 교육 전문가 육성 및 취업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영유아교육 양성기관 현장 취업과 재교육 방안이다. 기본적인 전제는 성인 인적자원과 청소년 인적자원의 영유아교육 전문가 양성 및 취업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청소년 인적자원이 영유아교육 양성과정에 입학하고 취업하는 과정은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북한이탈 성인 인적자원의 영유아교육 전문가 육성 및 취업 방안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 인적자원을 통일한국의 유능한 전문인으로 양성하는 동시에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다. 우선 북한 유아교육을 직접 경험한 인적자원들이 남한의 교육현장에 참여하면서 당면하는 갈등과 문제해결 과정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하거나 우리교육의 장점만을 무조건 수용하도록 하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그들이 서서히 우리교육의 장점과 단점을 익히면서 스스로의 가치관과 이념을 점차 해소해 가는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향후 통일한국의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가와 유아교사들의 연결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주체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남한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한 극복과정은 향후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게 될 북한 영유아교원들에게 소중한 선행적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들은 북한과 남한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 이러한 일을 위해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는 통일비용을 사용하여 제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이탈 청소년 인적자원의 영유아교육 양성기관 입학 및 취업 방안

2008년 6세 이상 20세 이하 새터민 아동 및 청소년의 수는 1,56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터민 아동·청소년 수는 전체 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 수 2만 5천명에 비하면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 새터민 청소년 들이 겪고 있는 교육적 문제들은 통일한국 시대에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겪게 될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새터민 청소년 들이 우리 학교와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남북한 교육의 통합을 준비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조정아, 2008). 이러한 노력의 하나는 새터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유아교사 양성과정으로 안내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이다.

탈북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영유아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취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양성과정에서부터 멘토를 두어 적응과정을 조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영유아 교원 양성과정에 진입한 새터민 청소년들에게는 멘토의 조력을 통하여 다양한 영유아 교육현장을 관찰하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 교원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영유아교육기관에 취업하여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영유아 교원양성 과정과 영유아 교육현장 취업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는 통일비용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IV. 남북한 영유아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과 교류방안 모색

남한의 정부는 1989년 이후 보완·발전시켜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통일과정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통일부통일교육원, 2008). 남북한 영유아교육 현장의 지원과 전문가의 교류 방안에 대한 모색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단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1. 남북한 영유아교육 현장의 지원과 교류 방안

1995년 북한은 세계를 대상으로 긴급지원 요청을 하게 되었다. 남한의 민간단체들은 대북지원에 동참하여 초기에는 밀가루, 쌀, 분유, 의약품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긴급구호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교육분야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탁아소와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분유, 영양빵, 두유, 예방접종과 치료 등의 긴급구호에 초점을 두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교과서용 종이 지원, 학용품과 교육기자재 지원, 학교시설의 개·보수 등 교육물자 지원 중심의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있다(윤종혁, 2007). 북한의 영유아교육 현장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인도적 차원에서 복지과 교육 자료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 개방 전에도 북한 유아교육자들로 하여금 남한의 유아교육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물적 지원이 꾸준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2. 남북한 영유아교육 전문가의 교류 협력 방안

1990년 중반 이전에 남북한의 교육 교류협력은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이루어져왔다. 민간차원의 대화와 교류는 남북 당국의 통제 아래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벗어난 대북접촉은 실정법 위함으로 처벌되기도 하였다. 남북한 교육 교류는 중국의 연변지역 등의 제 3국에서 남북한 학자들의 접촉이나 학술대회, 학생운동을 주도해 온 대학생들의 방북행사나 교류 등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북한은 그동안 사상과 이념을 다루는 교육분야의 교류나 협력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으나 민간단체의 지원을 계기로 교육분야의 지원과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교육적인 지원과 연계된 교류와 협력의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신효숙, 2007; 윤종혁, 2007).

남북한 영유아 교원의 상호 탐방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이해의 공감대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유아교육 기관을 관찰 할 수 있는 상호방문의 기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 교육을 위한 남북한 전문가들의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다. 변화하는 정치적 상황을 대비한 영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합의하여 진행하는 발전적인 연구 풍토와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단계이다.

V. 통일한국의 영유아교원 교육제도 및 정책방향 설문조사

1. 설문조사 대상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설문대상

연구를 위하여 영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예비교사,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원, 장학사(행정직), 학부모,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자 중 영유아교원 및 학부모의 설문을 위해서는 서울, 경기, 광주 등을 포함 전국적 분포를 고려하여 협회의 명부를 통하여 연구자가 직접 약 80여 기관인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선정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통화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하였다. 예비교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의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장학사(행정직)의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전국 유아교육행정가협의회의 협력을 얻거나 해당 시·도 담당 장학관에게 전화로 협조를 얻어 해당 지역의 관내 장학사들에게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답신메일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통일원의 담당자의 협력을 얻어 새터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설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1> 설문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례수(비율)

연령	사례수(비율)	직업 및 신분	사례수(비율)
20-30세	344(59.1)	예비교사	196(33.7)
31-40세	125(21.5)	영유아교원	177(30.4)
41-50세	78(13.4)	장학사(행정직)	25(4.3)
51세 이상	35(6.0)	학부모	58(10.0)
		북한이탈주민	126(21.6)
교육경력	사례수(비율)	학력수준	사례수(비율)
없음	238(40.9)	고등학교졸업	120(20.6)
5년미만	176(30.2)	대학교재학중	200(34.4)
5-10년	81(13.9)	전문대학졸업	98(16.8)
11-15년	31(5.3)	4년제대학졸업	118(20.3)
16년이상	56(9.7)	대학원졸업	46(7.9)
전체		582(100)	

2. 설문을 위한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을 위한 측정도구의 구성은 연구문제에 따라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 문항의 구성은 설문대상자의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4문항을 제시하였고,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설문대상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20문항을 제시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된 20개의 설문문항 중 6문항은 선택문항으로 제시되었고, 16문항은 리커트(Likert) 척도 형식으로 제시되었다.

5단계 리커트 척도 형식은 '매우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모르겠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반응으로 평가되고,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반응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3점 이상의 점수를 기준으로 5점에 가까울수록 문헌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 및 정책에 관련된 설문문항에 대한 설문자들의 동의정도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지표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1) 측정도구의 범주 및 내용

<표 2> 통일한국 시대의 영유아교원 교육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문항

문항번호	범주	문항 내용
	설문대상자 인구사회학적특성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
문항1		통일한국의 개념에 대한 동의정도
문항2		통일한국 유치원교사 양성기간
문항3		유치원교사의 명칭 사용
문항4		통일한국 보육교사 양성기간
문항5		보육교사의 명칭 사용
문항6		통일한국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제도정비의 필요성
문항7		통일한국 영유아교사의 자질
문항8	통일한국 영유아 교원양성 재교육	통일한국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조할 내용요소
문항9		통일한국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것
문항10		현재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과정에서의 통일교육 실시 정도
문항11		현재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과정에서 통일교육 내용의 추가 필요성
문항12		기존 자격증에 대한 교환의 필요성
문항13		기존 자격증을 교환할 때의 재교육 여부

문항14		북한이탈 청소년의 차세대 영유아교육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
문항15	북한이탈	북한이탈 주민의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방안
문항16	주민지원	북한이탈 주민 및 청소년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비용 국가부담여부
문항17	방안	영유아교사 자격증 취득 후 남한사회 이해를 위한 수습기간의 필요성
문항18		북한이탈 주민 및 청소년 출신 교사에 대한 신뢰 정도
문항19	남북한 교류협력	남북한 영유아교육 현장의 교류, 협력, 지원의 필요성
문항20	지원	남북한 영유아교육 분야의 교류, 협력, 지원의 방식

2) 측정도구의 타당도

측정도구는 통일교육 연구와 관련이 있는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에 대한 1차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4인의 통일교육 및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설문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반응한 결과를 분석한 1차 타당도는 .61로 나타났다. 설문문항에 대한 2차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1차 타당도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각 설문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결과를 기초하여 수정, 보완, 삭제, 추가 등의 과정을 통하여 2차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동일한 전문가들에게 2차 내용타당도 검증을 의뢰하여 각 문항에 대한 적합성을 평정한 결과를 분석한 2차 타당도는 .96으로 나타났다. 2차 내용타당도는 전문가들이 평정한 1차타당도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31문항 중 4문항을 삭제하였고, 4문항을 통합하였으며, 1문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24문항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24문항으로 새롭게 제작된 설문지를 4인의 전문가에게 2차적으로 설문지 문항 내용의 적합도에 대한 평정을 의뢰하여 반응한 결과를 분석한 내용타당도는 .96으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의 신뢰도

설문지 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값을 산정하였다. Windows용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에 대한 신뢰도는 .56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신뢰도 검사를 위한 분석결과는 표와 같다. 1-4번 문항은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문항을 제외한 20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결과 Alpha =.5574였다.

3. 자료분석 방법

설문문항에 대한 결과분석 과정에서는 우선적으로 문항에 대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분석하고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결과분석은 Windows용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582명이 반응한 결과를 코딩하여 각 문항에 따라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고,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통한 교차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4.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통일한국의 영유아 교원교육 제도 및 정책 방향 모색

(1) 통일한국 개념정의에 대한 동의정도

‘남북한이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통일한국으로 본다’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582명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평균점수는 3.65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수의 수준을 볼 때 설문자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수준에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통일한국의 개념에 대한 동의정도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61.9%로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응비율은 9.6%로 낮게 나타났으며, 28.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통일한국의 개념적 동의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아직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에 따라 응답자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통일한국 개념의 동의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

							N(%)	
평정척도		매우 아니다	아니다	모르 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x2
연 령	20-30세	3(0.1)	40(11.6)	128(37.2)	145(42.2)	28(0.8)	344(100.0)	64.979 df=16, p< .001
	31-40세	0(0)	7(5.6)	25(21.0)	70(56.0)	23(18.4)	125(100.0)	
	41-50세	0(0)	4(5.1)	7(9.0)	45(57.7)	22(28.2)	78(100.0)	
	51세이상	0(0)	2(5.7)	6(17.1)	21(60.0)	6(17.1)	35(100.0)	

학 력 수 준	고교졸업	0(0)	4(3.4)	27(21.4)	48(40.2)	41(35.0)	117(100.0)	98.774 df=24, p< .001
	전문대졸	0(0)	12(12.2)	32(32.7)	48(49.0)	6(6.1)	98(100.0)	
	4년제대졸	1(8)	11(9.3)	25(21.2)	70(59.3)	11(9.3)	118(100.0)	
	대학원졸	0(0)	1(2.2)	5(10.9)	30(65.2)	10(21.7)	46(100.0)	
교 육 경 력	대학교재학	2(1.0)	25(12.5)	77(38.5)	85(42.5)	11(5.5)	210(100.0)	37.958 df=21, p< .005
없음	2(8)	21(8.4)	70(29.4)	109(45.8)	37(15.5)	238(100.0)		
5년미만	1(6)	18(10.2)	65(36.9)	81(46.0)	11(6.3)	176(100.0)		
5-10년	0(0)	11(13.6)	17(21.0)	40(49.4)	13(16.0)	81(100.0)		
11-15년	0(0)	2(6.5)	7(22.6)	16(51.6)	6(19.4)	31(100.0)		
16년이상	0(0)	2(3.6)	7(12.5)	35(62.5)	12(21.4)	56(100.0)		
직 업 및 신 분	예비교사	2(1.0)	25(12.8)	81(41.3)	80(40.8)	8(4.1)	196(100.0)	112.569 df=16, p< .001
	영유아교원	1(6)	19(10.7)	45(25.4)	98(55.4)	14(7.9)	177(100.0)	
	장학사	0(0)	0(0)	4(16.0)	17(68.0)	4(16.0)	25(100.0)	
	학부모	0(0)	7(12.1)	12(21.7)	33(56.9)	6(10.3)	58(100.0)	
분 전 체	북한이탈주민	0(0)	2(1.6)	24(19.0)	53(42.1)	47(37.3)	126(100.0)	
전 체		3(5)	53(9.1)	166(28.5)	281(48.3)	79(13.6)	582(100.0)	

상술한 바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연령적 특성을 볼 때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40대 연령층에서 8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30세 집단에서는 43.0%로 가장 낮았으며 37.2%의 응답자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적 응답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학력수준을 볼 때 대학원 졸업자의 동의정도가 86.7%로 가장 높았고,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동의정도가 48%로 가장 낮았으며 38.5%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원 수업을 통하여 이론과 실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경험한 집단이 아직 학문연마에 초점을 두는 대학생 집단보다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더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교육 경력을 볼 때 16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고 있는 집단의 83.9%가 가장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5년 미만의 경력집단에서 긍정적 반응비율이 52.5%로 가장 낮은 수준의 반응 정도를 보였고 36.9%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넷째, 직업 및 신분을 볼 때 장학사 집단이 84.0%로 가장 적극적인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예비교사 집단이 44.9%로 가장 낮았으며 41.3%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관련 내용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직접 경험하고 있거나 담당하고 있는 전문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이고 있고,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집단에서 낮은 수준의 동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반응을 볼 때 79.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19%가 유보적이며, 1.6%만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통일한국 유치원교사의 양성기간

‘통일한국 유치원교사의 양성기간은 몇 년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분석결과 통일한국의 유치원교사 양성기간으로 가장 선호하는 학제로는 전체 응답자의 45.0%가 선택한 4년제 대학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학제로는 3-4년제 혼용 24.1%, 3년제 22.9% 순으로 나타났다. 1년제, 2년제가 좋다고 반응한 비율은 8%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유치원교사의 양성은 3년제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양성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통일한국 유치원교사의 양성기간

							N(%)	
구분	1년제	2년제	3년제	4년제	3-4년제	전체	x2	
연령	20-30세	5(1.5)	15(4.5)	73(19.9)	157(46.1)	94(28.0)	344(100.0)	29.144 df=16, p< .05
	31-40세	2(1.6)	12(9.6)	35(28.0)	53(42.4)	23(18.4)	125(100.0)	
	41-50세	1(1.3)	9(11.5)	16(21.5)	34(43.6)	18(23.1)	78(100.0)	
	51세이상	1(2.9)	2(5.7)	9(25.7)	18(51.4)	5(14.3)	35(100.0)	
학력수준	고교졸업	9(7.7)	27(23.1)	50(40.2)	19(16.2)	15(12.8)	121(100.0)	196.499 df=24, p< .05
	전문대졸	0(0)	4(4.1)	31(31.6)	32(32.7)	31(31.6)	98(100.0)	
	4년제대졸	0(0)	2(1.7)	12(10.2)	76(64.4)	28(23.7)	118(100.0)	
	대학원졸	0(0)	2(4.3)	6(13.0)	32(69.6)	6(13.0)	46(100.0)	
교육경력	대학교재학	0(0)	3(1.5)	34(17.0)	103(51.5)	60(30.0)	210(100.0)	30.071 df=21, p> .05
	없음	4(1.7)	22(9.2)	60(25.2)	91(38.2)	61(25.6)	238(100.0)	
	5년미만	2(1.1)	10(5.7)	36(21.5)	78(44.3)	50(28.4)	176(100.0)	
	5-10년	2(2.5)	2(2.5)	2(25.9)	41(50.6)	15(18.5)	81(100.0)	
직업 및 신분	11-15년	1(3.2)	3(9.7)	9(29.0)	13(41.9)	5(16.1)	31(100.0)	p> .05
	16년이상	0(0)	1(1.8)	7(12.5)	39(69.6)	9(16.1)	56(100.0)	
	예비교사	0(0)	1(5)	32(16.3)	101(51.5)	62(31.6)	196(100.0)	
	영유아교원	0(0)	2(1.1)	42(23.7)	90(50.8)	43(24.3)	177(100.0)	
신분	장학사	0(0)	0(0)	0(0)	21(84.0)	4(16.0)	25(100.0)	212.213 df=16, p< .05
	학부모	0(0)	4(6.9)	6(10.3)	31(53.4)	17(29.3)	58(100.0)	
	북한이탈주민	9(7.1)	31(24.6)	53(42.1)	19(15.1)	14(11.1)	126(100.0)	
	전체	9(1.5)	38(6.5)	133(22.9)	262(45.0)	140(24.1)	582(100.0)	

상술한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연령, 학력수준, 직업 및 신분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교육경력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첫째, 연령을 볼 때 30-50대 연령층 모두에서 유치원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이 방안을 선호하였다. 둘째, 학력수준을 볼 때는 4년제, 대학원, 대학교 재학 집단에서는 4년제 대학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계층에서는 3년제, 4년제, 3-4년제 혼용을 비슷한 수준

으로 선호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계층에서는 3년제 대학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셋째, 직업 및 신분을 볼 때 예비교사, 영유아교원, 장학사, 학부모 모두에서 4년제 대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북한이탈주민 집단에서는 3년제 대학을 가장 선호하였다. 북한의 유치원 교양원 양성기간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3) 유치원교사에 대한 명칭 사용

'통일한국의 유치원교사의 명칭을 유치원교사로 통일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582명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평균점수는 3.94로 나타났다. 북한에게 부르고 있는 교양원이라는 명칭보다는 남한에서 부르고 있는 유치원교사의 명칭 사용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치원교사에 대한 명칭 사용에 대한 동의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82.7%로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4.8%에 불과하였으며,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응답비율은 12.5%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에 따라 응답자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유치원교사에 대한 명칭 사용

평정척도	매우					전체	x ²
	아니다	아니다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연령	20-30세	1(3)	16(4.8)	49(13.7)	223(64.9)	55(16.4)	15.159 df=16, p> .05
	31-40세	1(8)	2(1.6)	15(12.0)	88(70.4)	19(15.2)	
	41-50세	0(0)	6(7.7)	7(9.0)	51(65.4)	14(17.9)	
	51세이상	0(0)	2(5.7)	2(5.7)	23(65.7)	8(22.9)	
학력수준	고교졸업	0(0)	1(9)	24(21.5)	71(58.1)	24(21.5)	39.522 df=24, p< .05
	전문대졸	1(1.0)	6(6.1)	10(10.2)	71(72.4)	10(10.2)	
	4년제대졸	0(0)	7(5.9)	7(5.9)	89(75.4)	15(12.7)	
	대학원졸	0(0)	5(10.9)	2(4.3)	26(56.5)	13(28.3)	
대학교재학	1(5)	7(3.5)	30(15.0)	128(64.0)	34(17.0)	210(100.0)	
교육경력	없음	1(4)	4(1.7)	41(17.2)	153(64.3)	39(16.4)	37.269 df=21, p< .05
	5년미만	1(6)	12(6.8)	16(9.1)	119(67.6)	28(15.9)	
	5-10년	0(0)	2(2.5)	9(11.1)	58(71.6)	12(14.8)	
	11-15년	0(0)	2(6.5)	2(6.5)	24(77.4)	3(9.7)	
16년이상	0(0)	6(10.7)	5(8.9)	31(55.4)	14(25.0)	56(100.0)	
직업 및 신분	예비교사	1(5)	10(5.1)	29(14.8)	125(63.8)	31(15.8)	40.155 df=16, p< .05
	영유아교원	0(0)	11(6.2)	14(7.9)	125(70.6)	27(15.3)	
	장학사	0(0)	4(16.0)	2(8.0)	11(44.0)	8(32.0)	
	학부모	1(1.7)	1(1.7)	3(5.2)	45(77.6)	8(13.8)	
	북한이탈주민	0(0)	0(0)	25(19.8)	79(62.7)	22(17.5)	
전체	2(3)	26(4.5)	73(12.5)	385(66.2)	96(16.5)	582(100.0)	

상술한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학력수준을 볼 때 전문대졸, 4년제대졸, 대학원졸, 대학교재학의 응답자들에 비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동의비율이 다소 낮았고 유보비율도 21.5%로 다른 계층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둘째, 교육경력을 볼 때 5년-16년 이상 경력자에 비하여 경력이 없거나 5년 미만인 집단의 동의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셋째, 직업 및 신분을 볼 때 학부모 집단의 동의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학사 집단의 동의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장학사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16.0%가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유아학교에 대한 논의가 응답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4) 통일한국 보육교사의 양성기간

'통일한국의 보육교사 양성기간은 몇 년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설문대상자 582명의 반응결과를 분석한 결과 통일한국의 보육교사 양성기간으로 가장 선호하는 학제는 3년제 (32.1%)와 4년제(31.1%)가 비슷한 수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선호하는 학제는 2년제였으며, 1년제와 1,2,3,4년제 혼용 학제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반응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통일한국의 보육교사 양성기간은 3년제와 4년제를 근간으로 하여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통일한국 보육교사의 양성기간

		N(%)						
구분	1년제	2년제	3년제	4년제	1,2,3,4 년제 혼용	전체	x2	
연령	20-30세	15(4.2)	66(19.0)	121(34.8)	116(34.2)	26(7.7)	344(100.0)	23.333 df=16 p> .05
	31-40세	10(8.0)	38(30.4)	36(28.8)	31(24.8)	10(8.0)	125(100.0)	
	41-50세	6(7.7)	24(30.8)	23(29.5)	22(28.2)	3(3.8)	78(100.0)	
	51세이상	3(8.6)	12(34.3)	7(21.0)	12(34.3)	1(2.9)	35(100.0)	
학력수준	고교졸업	18(14.5)	35(28.2)	36(30.8)	24(21.5)	7(6.0)	117(100.0)	53.595 df=24, p< .05
	전문대졸	7(7.1)	21(21.4)	34(34.7)	28(28.6)	9(9.2)	98(100.0)	
	4년제대졸	4(3.4)	27(22.9)	34(28.8)	47(39.8)	6(5.1)	118(100.0)	
	대학원졸	1(2.2)	17(37.0)	10(21.7)	16(34.8)	2(4.3)	46(100.0)	
대학교재학	4(2.0)	41(21.5)	73(36.5)	66(33.0)	16(8.0)	210(100.0)		

교육경력	없음	19(8.0)	58(24.4)	84(35.3)	56(23.5)	21(8.8)	238(100.0)	28.480 df=21, p> .05
	5년미만	7(4.0)	35(19.9)	56(31.8)	64(36.4)	14(8.0)	176(100.0)	
	5-10년	2(2.5)	18(22.2)	25(30.9)	32(39.5)	4(4.9)	81(100.0)	
	11-15년	3(9.7)	9(29.0)	8(25.8)	11(35.5)	0(0.0)	31(100.0)	
	16년이상	0(0.0)	20(35.7)	14(25.0)	18(32.1)	1(1.7)	56(100.0)	
직업 및 신분	예비교사	2(1.0)	38(19.4)	74(37.8)	66(33.7)	16(8.2)	196(100.0)	54.525 df=21, p< .05
	영유아교원	9(5.1)	36(21.3)	56(31.6)	66(37.3)	10(5.6)	177(100.0)	
	장학사	0(0.0)	11(44.0)	6(24.0)	7(28.0)	1(4.0)	25(100.0)	
	학부모	4(6.9)	18(31.0)	12(21.7)	17(29.3)	7(12.1)	58(100.0)	
	북한이탈주민	19(15.1)	37(29.4)	39(31.0)	25(19.8)	6(4.8)	126(100.0)	
전체	34(5.8)	140(24.1)	187(32.1)	181(31.1)	40(6.9)	582(100.0)		

상술한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학력수준, 직업 및 신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연령, 교육경력에 있어서는 반응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학력수준을 볼 때 전문대졸, 4년제대졸, 대학교재학 집단에서는 보육교사 양성기간을 3년제 및 4년제를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원졸 집단에서는 응답자의 37.0%가 2년제를 선호하였다. 특히 고교졸업자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인 14.5%가 1년제를 선택하였다. 1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보육교사교육원 출신 보육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직업 및 신분을 볼 때 예비교사 및 영유아교원 집단은 3년제와 4년제를 가장 선호하였고, 장학사 및 학부모 집단은 2년제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15.1%가 1년제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북한에서 양성되고 있는 탁아소 보육원의 3-6개월 양성기간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5) 보육교사 명칭 사용

'통일한국의 보육시설 교사의 명칭을 보육교사로 통일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582명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평균점수는 3.66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탁아소에서 부르고 있는 보육원이라는 명칭보다는 남한에서 부르고 있는 보육교사의 명칭 사용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보육교사의 명칭 사용에 대한 동의정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68.7%이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12.5%이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낸 응답비율은 18.7%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에 따른 응답자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보육교사 명칭 사용

평정척도	N(%)						x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연령	20-30세	6(0)	41(0)	74(22.0)	183(0)	40(11.9)	344(100.0)	23.471 df=21, p> .05
	31-40세	2(1.6)	12(9.6)	21(16.8)	78(62.4)	12(9.6)	125(100.0)	
	41-50세	1(1.3)	7(9.0)	13(16.7)	45(57.7)	12(15.4)	78(100.0)	
	51세이상	0(0)	4(11.4)	1(2.9)	27(77.1)	3(8.6)	35(100.0)	
학력수준	고교졸업	0(0)	4(2.6)	22(18.8)	71(59.0)	23(19.7)	120(100.0)	33.227 df=24, p> .05
	전문대졸	1(1.0)	15(15.3)	18(18.4)	53(54.1)	11(11.2)	98(100.0)	
	4년제대졸	2(1.7)	15(12.7)	18(15.3)	75(63.6)	8(6.8)	118(100.0)	
	대학원졸	1(2.2)	9(19.6)	7(15.2)	24(52.2)	5(10.9)	46(100.0)	
교육경력	대학교재학	5(2.5)	21(10.5)	44(22.0)	110(55.0)	21(10.0)	210(100.0)	17.670 df=21, p> .05
	없음	2(8)	18(7.6)	48(21.2)	144(60.5)	26(10.9)	238(100.0)	
	5년미만	4(2.3)	19(10.8)	36(21.5)	94(53.4)	23(13.1)	176(100.0)	
	5-10년	2(2.5)	14(17.3)	12(14.8)	45(55.6)	8(9.9)	81(100.0)	
	11-15년	0(0)	5(16.1)	7(22.6)	16(51.6)	3(9.7)	31(100.0)	
직업 및 신분	16년이상	1(0)	8(9.1)	6(18.2)	34(72.7)	7(0)	56(100.0)	32.368 df=16, p< .05
	예비교사	5(2.6)	21(10.2)	42(21.4)	111(56.6)	18(9.2)	196(100.0)	
	영유아교원	2(1.1)	28(15.8)	36(21.3)	93(52.5)	18(10.2)	177(100.0)	
	장학사	1(4.0)	6(24.0)	2(8.0)	14(56.0)	2(8.0)	25(100.0)	
	학부모	1(1.7)	7(12.1)	8(13.8)	36(62.1)	6(10.3)	58(100.0)	
분	북한이탈주민	0(0)	3(2.4)	21(16.7)	79(62.7)	23(18.3)	126(100.0)	
	전체	9(1.5)	64(11.0)	109(18.7)	333(57.2)	67(11.5)	582(100.0)	

상술한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직업 및 신분에 있어서만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고,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 및 신분을 볼 때 예비교사, 영유아교원, 장학사, 학부모 집단이 모두 비슷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비하여 특히 북한이탈주민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들보다 더 높은 수준인 81%가 보육교사 명칭사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집단에서도 현재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육원이라는 명칭보다는 교사의 명칭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통일한국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제도정비

'통일한국에 적합한 표준화된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을 교육과정과 이를 위한 제도

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582명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평균점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는 4.14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설문대상자들은 통일한국에 적합한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에 대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한국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에 대한 제도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문 응답자의 87.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6%에 불과하였으며,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9.8%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에 따른 응답자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통일한국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제도정비

평정척도	N(%)					전체	x ²	
	매우 아니다	아니다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연령	20-30세	1(0.3)	3(0.9)	37(10.8)	215(62.5)	88(25.6)	344(100.0)	36.727 df=16, p< .05
	31-40세	3(2.4)	7(5.6)	15(12.0)	59(47.2)	41(32.8)	125(100.0)	
	41-50세	0(0)	0(0)	2(2.6)	44(56.4)	32(41.0)	78(100.0)	
	51세이상	0(0)	1(2.9)	3(8.6)	19(54.3)	12(34.3)	35(100.0)	
학력	고교졸업	1(0.1)	6(5.1)	18(15.4)	67(57.3)	28(23.9)	117(100.0)	44.443 df=24, p< .05
	전문대졸	2(2.0)	2(2.0)	8(8.2)	61(62.2)	25(25.5)	98(100.0)	
	4년제대졸	0(0)	1(8)	7(5.9)	66(55.9)	44(37.3)	118(100.0)	
	대학원졸	0(0)	1(2.2)	3(6.5)	16(34.8)	26(56.5)	46(100.0)	
교육경력	대학교재학	1(5)	1(5)	21(10.5)	127(63.5)	50(25.0)	210(100.0)	36.485 df=21, p< .05
	없음	1(4)	5(2.1)	30(12.6)	143(60.1)	59(24.8)	238(100.0)	
	5년미만	2(1.1)	3(1.7)	14(8.0)	111(63.1)	46(26.1)	176(100.0)	
	5-10년	0(0)	2(2.5)	7(8.6)	43(53.1)	29(35.8)	81(100.0)	
직업 및 신분	11-15년	1(3.2)	1(3.2)	5(16.1)	16(51.6)	8(25.8)	31(100.0)	39.727 df=16, p< .05
	16년이상	0(0)	0(0)	1(1.8)	24(42.8)	31(55.4)	56(100.0)	
	예비교사	1(5)	0(0)	23(11.7)	122(62.2)	50(25.5)	196(100.0)	
	영유아교원	1(6)	3(1.7)	11(6.2)	101(57.1)	61(34.5)	77(100.0)	
전체	장학사	0(0)	1(4.0)	1(4.0)	7(28.0)	16(64.0)	25(100.0)	58(100.0)
	학부모	2(3.4)	2(3.4)	6(10.3)	31(53.4)	17(29.3)	58(100.0)	
	북한이탈주민	0(0)	5(4.0)	16(12.7)	76(60.3)	29(23.0)	126(100.0)	
	전체	4(7)	11(1.9)	57(9.8)	337(57.9)	173(29.7)	582(100.0)	

상술한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연령을 볼 때 20-50세 이상의 대부분 연령 집단에서 매우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둘째, 학력수준을 볼 때 전문대졸, 전문대졸, 4년제졸, 대학원졸, 대학교재학 집단 모두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교졸업 집단에서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78.6%의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15.4%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셋째, 교육경력을 볼 때 대부분의 경력집단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교육경력이 없는 집단의 긍정적 반응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12.6%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넷째, 직업 및 신분을 볼 때 영유아교원, 장학사, 학부모 집단에 비하여 예비교사 및 북한이탈주민 집단의 긍정적 반응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각각 11.7%와 121.7%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 예비교사 신분의 위치에 있거나 혹은 아직 한국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사양성 및 재교육의 필요성 판단에 따른 어려움이 다소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7) 통일한국 영유아교사의 자질

‘통일 한국의 영유아교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설문대상자 582명의 반응결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사의 1순위권 자질은 올바른 인성과 포용력으로 나타났고, 2순위권 자질로는 다문화주의, 3순위권 자질로는 투철한 교육관, 관용의 배품, 교수-학습능력으로 나타났으며, 4순위권 자질로는 이타적 사랑과 탐구력을 선택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인구사회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반응을 분석한 결과 연령, 학력수준, 직업 및 신분 특성에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고, 교육경력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9> 통일한국 영유아교사의 자질(연령)

교사의 자질	N(%)				
	20-30세	31-40세	41-50세	51세이상	전체
교수학습능력	28(8.1)	4(3.2)	6(7.7)	4(11.4)	42(7.2)
올바른인성	82(23.8)	25(21.0)	21(25.6)	6(17.1)	133(22.9)
공정성	7(2.0)	2(1.6)	3(3.8)	4(11.4)	16(2.7)
투철한교육관	14(4.0)	17(13.6)	10(12.8)	6(17.1)	47(8.1)
창의력	5(1.4)	6(4.8)	1(1.3)	1(2.9)	13(2.2)
탐구력	5(1.4)	9(7.2)	4(5.1)	2(5.7)	21(3.4)
리더십	11(3.2)	2(1.6)	2(2.6)	0(0)	15(2.6)
포용력	77(22.4)	31(24.8)	12(15.4)	8(22.9)	128(22.0)

이타적사랑	14(4.0)	9(7.2)	6(7.7)	0(0)	29(5.0)
관용의배품	23(6.7)	8(6.4)	8(10.3)	4(11.4)	43(7.4)
다문화주의	74(21.5)	12(9.6)	6(7.7)	0(0)	92(15.8)
기타	4(1.2)	0(0)	0(0)	0(0)	4(7)
전체	344(100.0)	125(100.0)	78(100.0)	35(100.0)	582(100.0)
x ²		105.173	df=44, p< .001		

상술한 바와 같이 통일한국 영유아교사의 자질에 대하여 연령별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20-30세 집단에서는 올바른 인성, 포용력, 다문화주의를 가장 중요시 하였으며, 31-40세 집단에서는 포용력과 올바른 인성을 중요시 하였다. 또한 41-50세 집단에서는 올바른 인성, 포용력을 중요시 하였고, 51세 이상 집단에서는 포용력과 투철한 교육관을 가장 중요시 하였다. 이러한 연령적 특성에서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현재 예비교사 과정에 있거나 최근 교사가 된 연령으로 볼 수 있는 20-30대 집단에서 다문화주의가 교사의 중요한 자질임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교사교육 과정에서 다문화주의가 중요시 다루어지고 있는 특징이 설문문항 선택에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문화주의에 대한 중요성을 거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통일한국 영유아교사의 자질(학력수준)

교사의 자질	N(%)					
	고교졸업	전문대졸	4년제대졸	대학원졸	대학교재학	전체
교수학습능력	1(9)	6(6.1)	10(8.5)	5(10.9)	21(10.0)	42(7.2)
올바른인성	9(7.7)	24(24.5)	35(29.7)	14(30.4)	51(25.5)	133(22.9)
공정성	4(3.4)	3(3.1)	2(1.7)	1(2.2)	6(3.0)	16(2.7)
투철한교육관	25(21.5)	5(5.1)	3(2.5)	9(19.6)	5(2.5)	47(8.1)
창의력	3(2.6)	4(4.1)	3(2.5)	0(0)	3(1.5)	13(2.2)
탐구력	16(13.7)	1(1.0)	2(1.7)	1(2.2)	0(0)	21(3.4)
리더십	2(1.7)	1(1.0)	2(1.7)	1(2.2)	9(4.5)	15(2.6)
포용력	26(22.2)	27(27.6)	26(22.0)	7(15.2)	42(21.0)	128(22.0)
이타적사랑	15(12.0)	1(1.0)	5(4.2)	1(2.2)	7(3.5)	29(5.0)
관용의배품	17(13.7)	8(8.2)	7(5.9)	3(6.5)	8(4.0)	43(7.4)
다문화주의	2(1.7)	18(18.4)	23(19.5)	4(8.7)	45(22.5)	92(15.8)
기타	0(0)	0(0)	0(0)	0(0)	4(2.0)	4(7)
전체	120(100.0)	98(100.0)	118(100.0)	46(100.0)	210(100.0)	582(100.0)
x ²			212.583	df=66, p< .001		

통일한국 영유아교사의 자질에 대하여 학력수준의 특성으로 볼 때 고교졸업자 집단에서는 포용력과 투철한 교육관을 가장 중요시 하였고, 전문대졸과 4년제 대졸 집단에서는 올

바른 인성과 포용력을 중요시 하였으며, 대학원졸 집단에서는 올바른 인성과 투철한 교육관을 중요시 하였고, 대학교재학 집단에서는 올바른 인성, 다문화주의, 포용력을 중요시 하였다.

<표 11> 통일한국 영유아교사의 자질(직업 및 신분)

교사의 자질	N(%)					
	예비교사	영유아교원	장학사	학부모	북한이탈주민	전체
교수학습능력	21(10.2)	17(9.6)	1(4.0)	1(1.7)	3(2.4)	42(7.2)
올바른인성	53(27.0)	45(25.4)	10(40.0)	21(36.2)	4(3.2)	133(22.9)
공정성	5(2.6)	4(2.3)	2(8.0)	1(1.7)	4(3.2)	16(2.7)
투철한교육관	3(1.5)	11(6.2)	5(21.0)	2(3.4)	26(21.6)	47(8.1)
창의력	2(1.0)	5(2.8)	0(0)	1(1.7)	5(4.0)	13(2.2)
탐구력	0(0)	1(6)	0(0)	1(1.7)	18(14.3)	21(3.4)
리더십	10(5.1)	1(6)	0(0)	2(3.4)	2(1.6)	15(2.6)
포용력	40(21.4)	43(24.3)	4(16.0)	10(17.2)	31(24.6)	128(22.0)
이타적사랑	6(3.1)	2(1.10)	0(0)	6(10.3)	15(11.9)	29(5.0)
관용의배품	8(4.1)	12(6.8)	1(4.0)	4(6.9)	18(14.3)	43(7.4)
다문화주의	45(23.0)	36(21.3)	2(8.0)	9(15.5)	0(0)	92(15.8)
기타	4(2.0)	0(0)	0(0)	0(0)	0(0)	4(7)
전체	196(100.0)	177(100.0)	25(100.0)	58(100.0)	126(100.0)	582(100.0)
x ²			229.198	df=44,	p< .001	

통일한국 영유아교사의 자질에 대하여 직업 및 신분 특성을 볼 때 예비교사, 영유아교원, 학부모 집단에서는 올바른 인성, 다문화주의, 포용력을 가장 중요시 하였고, 장학사 집단에서는 올바른 인성, 투철한 교육관, 포용력을 중요시 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집단에서는 포용력과 투철한 교육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직업 및 신분 특성에서의 두드러진 차이는 예비교사, 영유아교원 집단에서 다문화주의 자질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장학사, 학부모 집단에서는 매우 낮은 반응을 보였고, 특히 북한이탈주민 집단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응답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8) 통일한국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조할 내용요소

'통일한국의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교육내용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설문대상자 582명의 반응결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순위 내용요소는 '남북한 상호 이해교육'이라고 응답하였고, 2순위로 강조되어야 할 내용요소는 '다문화반편견교육', '심리정서교육', '민족공동체의식교육'으로 응답하였으며, 3순위 교육내용 요소로는 '지역사회 및 부모교육',

평화교육'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의 인구사회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 반응을 분석한 결과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 특성에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고, 연령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2> 통일한국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조할 내용요소(학력수준)

교육내용 요소	N(%)					
	고교졸업	전문대졸	4년제대졸	대학원졸	대학교재학	전체
남북한상호이해교육	6(5.1)	24(24.5)	38(32.2)	17(37.0)	66(33.0)	151(25.9)
민주시민교육	1(.9)	2(2.0)	2(1.7)	3(6.5)	3(1.5)	11(1.9)
민족공동체의식교육	6(5.1)	10(10.2)	18(15.3)	8(17.4)	23(11.5)	65(11.2)
영유아관련전공교육	3(2.6)	11(11.2)	5(4.2)	3(6.5)	19(9.5)	41(7.0)
전통문화교육	8(6.8)	4(4.1)	1(.8)	3(6.5)	8(4.0)	24(4.1)
교수학습방법교육	4(3.4)	4(4.1)	8(6.8)	3(6.5)	8(4.0)	27(4.6)
체험학습활동교육	18(15.4)	5(5.1)	3(2.5)	1(2.2)	4(2.0)	31(5.3)
심리정서교육	2317.1)	15(15.3)	14(11.9)	2(4.3)	15(7.5)	68(11.7)
다문화반편견교육	7(6.0)	11(11.2)	16(13.6)	5(10.9)	29(14.5)	68(11.7)
지역사회및부모교육	22(17.9)	8(8.2)	3(2.5)	0(.0)	9(4.5)	4297.2)
평화교육	22(18.8)	3(3.1)	10(8.5)	1(2.2)	16(8.0)	52(8.9)
기타교육	1(.9)	1(1.0)	0(.0)	0(.0)	0(.0)	2(.3)
전체	120(100.0)	98(100.0)	118(100.0)	46(100.0)	210(100.0)	582(100.0)
x ²			167.695	df=66, p< .05		

통일한국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조해야 할 내용요소에 대하여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볼 때 고교졸업자는 심리정서교육, 지역사회 및 부모교육, 평화교육, 체험학습활동교육을 강조하였고, 전문대졸, 4년제졸, 대학원졸, 대학교 재학 모두에서는 남북한상호이해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강조되고 있는 내용요소를 볼 때 전문대졸 집단에서는 심리정서교육, 4년제대졸과 대학원졸 집단에서는 민족공동체의식교육, 대학교재학 집단에서는 다문화반편견교육, 민족공동체의식교육을 강조하였다.

<표 13> 통일한국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조할 내용요소(교육경력)

교육내용 요소	N(%)					
	없음	5년미만	5-10년	11-15년	16년이상	전체
남북한상호이해교육	63(26.5)	38(21.6)	23(28.4)	5(16.1)	22(39.2)	151(25.9)
민주시민교육	5(2.1)	3(1.7)	0(.0)	2(6.5)	1(0.2)	11(1.9)
민족공동체의식교육	21(8.8)	21(11.4)	8(9.9)	5(16.1)	11(19.6)	65(11.2)
영유아관련전공교육	12(5.0)	21(11.4)	6(7.4)	0(0.0)	3(0.6)	41(7.0)

전통문화교육	12(5.0)	6(3.4)	0(0)	3(9.7)	3(0.6)	24(4.1)
교수학습방법교육	8(3.4)	9(5.1)	6(7.4)	2(6.5)	2(0.4)	27(4.6)
체험학습활동교육	19(8.0)	6(3.4)	6(7.4)	0(0.0)	0(0.0)	31(5.3)
심리정서교육	31(13.0)	18(10.2)	10(12.3)	6(19.4)	3(0.6)	68(11.7)
다문화반편견교육	23(9.7)	25(14.2)	9(11.1)	3(9.7)	8(0.8)	68(11.7)
지역사회및부모교육	21(8.4)	14(8.0)	4(4.9)	2(6.5)	2(0.4)	42(9.2)
평화교육	24(10.1)	16(9.1)	9(11.1)	2(6.5)	1(0.2)	52(8.9)
기타교육	0(0.0)	1(0.6)	0(0.0)	1(3.2)	0(0.0)	2(0.3)
전체	238(100.0)	176(100.0)	81(100.0)	31(100.0)	56(100.0)	582(100.0)
x ²			76.512			df=55, p<.05

통일한국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조해야 할 내용요소에 대하여 교육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볼 때 경력 없음 집단에서는 남북한상호이해교육, 심리정서교육 순으로 반응하였고, 5년 미만 집단에서는 남북한상호이해교육, 다문화반편견교육 순으로 반응하였으며, 5-10년 집단에서는 심리정서교육, 남북한상호이해교육 순으로 반응하였다. 또한 11-15년 집단에서는 심리정서교육, 남북한상호이해교육 순으로 응답하였고, 16-20년 집단에서는 남북한상호이해교육과 다문화반편견교육을 중요시 하였으며, 21년 이상 집단에서는 남북한상호이해교육, 민족공동체의식교육 순으로 응답하였다.

(9) 질 높은 통일한국 영유아교사 양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통일 한국의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과정에서 질 높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체계적인 양성교육과정과 임금 및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양질의 교육시설설비, 교육방법의 통합노력, 교육제도 및 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4> 통일한국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것(연령)

양성 및 재교육과정	N(%)				
	20-30세	31-40세	41-50세	51세이상	전체
임금및처우개선	91()	9(7.2)	10(12.8)	2(5.7)	112(19.2)
체계적양성교육과정	65()	30(24.0)	22(28.2)	6(17.1)	123(21.1)
사상교육의통합노력	23()	10(8.0)	3(3.8)	2(5.7)	38(6.5)
교육제도및정책	33()	12(9.6)	13(16.7)	5(14.3)	63(10.8)
양질의교육시설설비	53()	21(16.8)	6(7.7)	6(17.1)	86(14.8)
교육방법의통합노력	41()	18(14.4)	14(17.9)	5(14.3)	78(13.4)
투철한교육관정립	18()	11(8.8)	3(3.8)	2(5.7)	34(5.8)

국가관및세계관정립	20()	14(11.2)	6(7.7)	5(14.3)	45(7.7)
기타	0()	0(0)	1(1.3)	2(5.7)	3(5)
전체	344(100.0)	125(100.0)	78(100.0)	35(100.0)	582(100.0)
x2		79.059	df=32,	p< .001	

질 높은 통일한국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하여 연령적 특성을 살펴볼 때 20-30세 집단에서는 임금 및 처우개선을 가장 중요시 하였고, 31-40세 집단과 41-50세 집단에서는 체계적인 양성교육과정을 중요시 하였으며, 50세 이상 집단에서는 체계적인 양성교육과정과 양질의 교육시설설비를 중요시 하였다. 연령이 어릴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5> 통일한국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것(학력수준)

	N(%)					
양성 및 재교육과정	고교졸업	전문대졸	4년제대졸	대학원졸	대학교재학	전체
임금및처우개선	3(2.6)	26(26.5)	22(18.6)	7(15.2)	54(27.0)	112(19.2)
체계적양성교육과정	9(7.7)	19(19.4)	39(33.1)	16(34.8)	40(21.0)	123(21.1)
사상교육의통합노력	11(9.4)	3(3.1)	7(5.9)	3(6.5)	14(7.0)	38(6.5)
교육제도및 정책	17(14.5)	5(5.1)	12(10.2)	7(15.2)	22(11.0)	63(10.8)
양질의교육시설설비	15(12.8)	26(26.5)	15(12.7)	4(8.7)	26(13.0)	86(14.8)
교육방법의통합노력	26(21.4)	16(16.3)	9(7.6)	3(6.5)	24(12.0)	78(13.4)
투철한교육관정립	17(14.5)	2(2.0)	6(5.1)	2(4.3)	7(3.5)	34(5.8)
국가관및세계관정립	20(15.4)	1(1.0)	7(5.9)	4(8.7)	13(6.5)	45(7.7)
기타	2(1.7)	0(0)	1(8)	0(0)	0(0)	3(5)
전체	120(100.0)	98(100.0)	118(100.0)	46(100.0)	210(100.0)	582(100.0)
x2			150.483	df=48,	p< .001	

질 높은 통일한국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하여 학력수준 특성에 따라 살펴볼 때 고교졸업 집단에서는 교육방법의 통합노력, 전문대졸 집단에서는 임금 및 처우개선과 양질의 교육시설설비, 4년제졸 집단과 대학원졸 집단에서는 체계적인 양성교육과정, 대학교 재학 집단에서는 임금 및 처우개선으로 나타났다.

<표 16> 통일한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것(교육경력)

	N(%)					
양성 및 재교육과정	없음	5년미만	5-10년	11-15년	16년이상	전체
임금및처우개선	38(16.0)	47(26.7)	21(24.7)	2(6.5)	5()	112(19.2)
체계적양성교육과정	46(19.3)	36(21.5)	14(17.3)	7(22.6)	20()	123(21.1)
사상교육의 통합노력	19(8.0)	8(4.5)	6(7.4)	1(3.2)	4()	38(6.5)
교육제도및 정책	30(12.6)	14(8.0)	8(9.9)	2(6.5)	9()	63(10.8)
양질의 교육시설설비	30(12.6)	25(14.2)	16(19.8)	6(19.4)	9()	86(14.8)

교육방법의 통합노력	39(16.4)	23(13.1)	6(7.4)	5(16.1)	5(0)	78(13.4)
투철한교육관정립	16(6.7)	9(5.1)	5(6.2)	4(12.9)	0(0)	34(5.8)
국가관및 세계관정립	19(8.0)	14(8.0)	6(7.4)	2(6.5)	4(0)	45(7.7)
기타	1(0.4)	0(0)	0(0)	2(6.5)	0(0)	3(0.5)
전체	238(100.0)	176(100.0)	81(100.0)	31(100.0)	56(100.0)	582(100.0)
χ^2			71.695	df=40,	p<	.005

질 높은 통일한국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하여 교육경력에 따른 특성을 살펴볼 때 5년 미만 집단과 5-10년 집단에서는 임금 및 처우개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11-15년 집단에서는 체계적 양성교육과정을 중요시 하였다. 또한 16년 이상 집단에서는 양질의 교육시설설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새롭게 교직 분야에 진출하여 적응해 나가고 있거나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는 초기경력 단계에 있는 교사들에게 교직의 질적인 문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임금 및 처우개선 문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로 사료된다.

<표 17> 통일한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것(직업 및 신분)

	N(%)					
양성 및 재교육과정	예비교사	영유아교원	장학사	학부모	북한이탈주민	전체
임금및처우개선	52(26.5)	50(28.2)	2(8.0)	6(10.3)	2(1.6)	112(19.2)
체계적양성교육과정	40(21.4)	41(23.2)	12(48.0)	21(36.2)	9(7.1)	123(21.1)
사상교육의 통합노력	14(7.1)	10(5.6)	2(8.0)	1(1.7)	11(8.7)	38(6.5)
교육제도및 정책	22(11.2)	14(7.9)	4(16.0)	4(6.9)	19(15.1)	63(10.8)
양질의 교육시설설비	29(14.8)	34(19.2)	2(8.0)	7(12.1)	14(11.1)	86(14.8)
교육방법의 통합노력	22(11.2)	17(9.6)	1(4.0)	6(10.3)	32(25.4)	78(13.4)
투철한교육관정립	5(2.6)	4(2.3)	0(0)	3(5.2)	22(17.5)	34(5.8)
국가관및 세계관정립	12(6.1)	7(4.0)	2(8.0)	7(12.1)	17(13.5)	45(7.7)
기타	0(0)	0(0)	0(0)	3(5.2)	0(0)	3(0.5)
전체	196(100.0)	177(100.0)	25(100.0)	58(100.0)	126(100.0)	582(100.0)
χ^2			171.236	df=32,	p<	.001

질 높은 통일한국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하여 직업 및 신분에 따른 차이를 볼 때 예비교사, 영유아교원 집단에서는 임금 및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장학사 집단과 학부모 집단에서는 체계적 양성교육과정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집단에서는 교육방법의 통합노력, 투철한 교육관 정립 순으로 응답하였다. 북한에서의 겪어왔던 교육적 경험에서 그 과정에서 강조되던 교육 방법, 사상교육 등의 영향이 설문응답에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10) 현재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과정에서의 통일교육 실시 정도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과정에서의 통일교육 실시 정도는 부정적 응답수준에 해당되는 평균 2.59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양성교육 및 재교육 과정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라 할 수 있다.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과정에서의 통일교육 실시정도에 대한 설문문항에 대하여 겨우 15.3%만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48.2%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36.3%가 유보적으로 응답하였다. 대체적으로 양성 및 재교육 과정에서 통일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에 따른 응답자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8> 현재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과정에서의 통일교육 실시 정도

							N(%)	
평정척도	매우 아니다	아니다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연령	20-30세	38(11.3)	140(41.1)	126(36.0)	35(10.1)	5(1.5)	344(100.0)	35.458 df=16, p< .005
	31-40세	13(10.4)	38(30.4)	55(44.0)	15(12.0)	4(3.2)	125(100.0)	
	41-50세	7(9.0)	35(44.9)	19(24.4)	14(17.9)	3(3.8)	78(100.0)	
	51세이상	4(11.4)	5(14.3)	13(37.1)	12(34.3)	1(2.9)	35(100.0)	
학력수준	고교졸업	1(9)	2(1.7)	64(53.8)	43(35.0)	10(8.5)	120(100.0)	184.764 df=24, p< .001
	전문대졸	11(11.2)	44(44.9)	36(36.7)	7(7.1)	0(0)	98(100.0)	
	4년제대졸	22(18.6)	59(50.0)	29(24.6)	8(6.8)	0(0)	118(100.0)	
	대학원졸	6(13.0)	23(50.0)	13(28.3)	2(4.3)	2(4.3)	46(100.0)	
대학교재학	22(11.0)	90(45.0)	71(35.5)	16(8.0)	1(5)	210(100.0)		
교육경력	없음	13(5.5)	64(26.9)	113(47.5)	42(17.6)	6(2.5)	238(100.0)	53.159 df=21 p< .001
	5년미만	23(13.1)	78(44.3)	57(32.4)	16(9.1)	2(1.1)	176(100.0)	
	5-10년	12(14.8)	36(44.4)	21(25.9)	9(11.1)	3(3.7)	81(100.0)	
	11-15년	3(9.7)	11(35.5)	10(32.3)	6(19.4)	1(3.2)	31(100.0)	
16년이상	11(8.2)	29(54.5)	12(27.3)	3(0)	12(0)	56(100.0)		
직업 및 신분	예비교사	21(0.7)	89(5.4)	72(6.7)	13(6)	1(5)	196(100.0)	221.843 df=16 p< .001
	영유아교원	31(17.5)	94(53.1)	42(23.7)	10(5.6)	0(0)	177(100.0)	
	장학사	5(21.0)	14(56.0)	6(24.0)	0(0)	0(0)	25(100.0)	
	학부모	5(8.6)	18(31.0)	31(53.4)	3(5.2)	1(1.7)	58(100.0)	
북한이탈주민	0(0)	3(2.4)	62(49.2)	50(39.7)	11(8.7)	126(100.0)		
전체	62(10.7)	18(37.5)	213(36.6)	76(13.1)	13(2.2)	582(100.0)		

상술한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연령적 특성을 볼 때 대부

분의 연령 집단에서 부정적이거나 유보적 입장이 강하게 나타났고, 51세 이상 집단에서만 두드러지게 유보적이거나 긍정적 반응이 우세하였다. 둘째, 학력수준으로 볼 때 대부분의 학력수준 집단에서 부정적이거나 유보적 입장이 우세하였고, 고교졸업 집단에서만 긍정적 입장이 우세하였다. 셋째, 교육경력을 볼 때 모든 집단에서 부정적이거나 유보적 입장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업 및 신분을 볼 때 예비교사, 영유아교원, 장학사, 학부모 집단에서는 부정적이거나 유보적 입장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유보적이거나 긍정적 반응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북한사회에서의 경험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11) 현재 남한의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추가적 필요성

'통일한국을 대비하여 현재 남한의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과정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문항에 대하여 582명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평균점수는 3.60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교원 양성과정 및 재교육 과정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이 더 추가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추가적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63.7%이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17.2%이며, 아직 보류적 입장을 보인 반응 비율은 27.1%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에 따른 응답자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9> 현재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과정에서 통일교육 내용의 추가 필요성

평정척도	N(%)						x ²	
	매우 아니다	아니다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연 령	20-30세	5(1.5)	39(11.3)	110(31.8)	171(49.7)	19(5.7)	344(100.0)	39.959 df=16 p< .001
	31-40세	0(0)	5(4.0)	32(25.6)	78(62.4)	10(8.0)	125(100.0)	
	41-50세	0(0)	3(3.8)	12(15.4)	51(65.4)	12(15.4)	78(100.0)	
	51세이상	0(0)	1(2.9)	4(11.4)	25(71.4)	5(14.3)	35(100.0)	
학 력 수 준	고교졸업	0(0)	5(4.3)	31(25.6)	67(55.6)	17(14.5)	120(100.0)	49.704 df=24 p< .005
	전문대졸	1(1.0)	10(10.2)	29(29.6)	53(54.1)	5(5.1)	98(100.0)	
	4년제대졸	2(1.7)	5(4.2)	27(22.9)	76(64.4)	8(6.8)	118(100.0)	
	대학원졸	0(0)	2(4.3)	3(6.5)	33(71.7)	8(17.4)	46(100.0)	
	대학교재학 없음	2(1.0)	26(13.0)	68(34.0)	96(48.0)	8(4.0)	210(100.0)	
	없음	1(4)	16(6.7)	75(31.5)	133(55.9)	13(5.5)	238(100.0)	

교육경력	5년미만	3(1.7)	21(11.9)	53(30.1)	86(48.9)	13(7.4)	176(100.0)	44.927 df=21 p< .001
	5-10년	1(1.2)	9(11.1)	18(22.2)	46(56.8)	7(8.6)	81(100.0)	
	11-15년	0(0)	0(0)	7(22.6)	23(74.2)	1(3.2)	31(100.0)	
	16년이상	0(0)	2(0)	5(0)	37(0)	12(0)	56(100.0)	
직업 및 신분	예비교사	2(1.0)	27(13.8)	69(35.2)	91(46.4)	7(3.6)	196(100.0)	49.145 df=16 p< .001
	영유아교원	3(1.7)	11(6.2)	43(24.3)	106(59.9)	14(7.9)	177(100.0)	
	장학사	0(0)	2(8.0)	1(4.0)	17(68.0)	5(21.0)	25(100.0)	
	학부모	0(0)	2(3.4)	18(31.0)	36(62.10)	2(3.4)	58(100.0)	
	북한이탈주민	0(0)	6(4.8)	27(21.4)	75(59.5)	18(14.3)	126(100.0)	
전체		5(9)	48(8.2)	158(27.1)	325(55.8)	46(7.9)	582(100.0)	

상술한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연령적 특성을 볼 때 나이가 높아질수록 통일교육의 내용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학력수준으로 볼 때 학력이 높을수록 추가 필요성에 대한 반응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학원졸 집단에서 71.7%의 가장 높은 반응비율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교육경력을 볼 때 대체적으로 교육경력이 낮을수록 필요성에 대한 반응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직업 및 신분을 볼 때 장학사 집단에서 가장 높은 반응비율을 보이고 있고, 예비교사 집단에서 가장 낮은 반응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12) 기존 자격증의 교환 필요성

'통일한국에서는 기존의 남북한 영유아교원 자격증을 상호 인정하여 새로운 교원 자격증으로 교환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문항에 대하여 582명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 응답수준인 평균 3.72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남북한에서 통용되고 있는 영유아교원 자격증에 대하여 통일한국에서는 새로운 자격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영유아교원의 기존 자격증을 교환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74.4%이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10.0%이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응비율은 16.7%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자격증을 교환해주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에 따른 응답자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0> 기존 자격증의 교환 필요성

평정척도	N(%)						x ²	
	매우 아니다	아니다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연령	20-30세	5(14.7)	36(10.5)	62(18.0)	218(63.3)	33(0.9)	344(100.0)	21.321 df=16 p> .05
	31-40세	1(0.8)	10(8.0)	21(16.0)	79(63.2)	15(12.0)	125(100.0)	
	41-50세	0(0.0)	4(5.1)	7(9.0)	60(76.9)	7(9.0)	78(100.0)	
	51세이상	2(5.7)	0(0.0)	8(22.9)	22(62.9)	3(8.6)	35(100.0)	
학력수준	고교졸업	0(0.0)	10(8.5)	27(22.2)	70(58.1)	13(11.1)	120(100.0)	37.491 df=24 p< .05
	전문대졸	1(1.0)	9(9.2)	21(21.4)	55(56.1)	12(12.2)	98(100.0)	
	4년제대졸	0(0.0)	9(7.6)	14(11.9)	81(68.6)	14(11.9)	118(100.0)	
	대학원졸	3(6.5)	1(2.2)	1(2.2)	34(73.9)	7(15.2)	46(100.0)	
대학교재학	4(2.0)	21(10.5)	34(17.0)	129(64.5)	12(6.0)	210(100.0)		
교육경력	없음	3(1.3)	22(9.2)	40(16.8)	152(63.9)	21(8.8)	238(100.0)	15.581 df=21 p> .05
	5년미만	3(1.7)	14(8.0)	34(19.3)	107(60.8)	18(10.2)	176(100.0)	
	5-10년	0(0.0)	8(9.9)	13(16.0)	49(60.5)	11(13.6)	81(100.0)	
	11-15년	0(0.0)	3(9.7)	6(19.4)	19(61.3)	3(9.7)	31(100.0)	
16년이상	2(3.6)	3(5.4)	4(7.1)	42(76)	5(8.0)	56(100.0)		
직업 및 신분	예비교사	4(2.0)	21(10.7)	32(16.3)	127(64.8)	12(6.1)	196(100.0)	25.219 df=16 p> .05
	영유아교원	1(0.6)	17(9.6)	31(17.5)	104(58.8)	24(13.6)	177(100.0)	
	장학사	2(8.0)	0(0.0)	2(8.0)	18(72.0)	3(12.0)	25(100.0)	
	학부모	1(1.7)	3(5.2)	7(12.1)	41(70.7)	6(10.3)	58(100.0)	
북한이탈주민	0(0.0)	9(7.1)	25(19.8)	79(62.7)	13(10.3)	126(100.0)		
전체	8(1.4)	50(8.6)	97(16.7)	369(63.4)	58(10.0)	582(100.0)		

상술한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학력수준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고,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을 볼 때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기존 자격증의 교환 필요성에 대하여 더 높게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학원 졸업 집단에서 73.9%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고교졸업 집단에서 가장 낮은 58.1%의 반응비율을 나타내었다.

(13) 자격증을 교환할 때의 재교육 여부

'통일한국에서 새로운 교원 자격증으로 교환해 줄 때 일정한 시간의 재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에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문항에 대하여 582명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 응답수준인 평균 3.79로 나타났다. 새로운 교원 자격증을 교환해 줄 때 일정한 시간의 재교육 과정을 수료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긍정

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은 71.0%이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9.1%이며, 보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응비율은 17.9%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에 따른 응답자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 자격증을 상호 교환할 때의 재교육 여부

평정척도	N(%)						x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연령	20-30세	8(23.5)	38(11.0)	69(20.1)	184(53.5)	45(13.1)	344(100.0)	40.760 df=16 p< .001	
	31-40세	0(0)	4(3.2)	17(13.6)	73(58.4)	31(24.8)	125(100.0)		
	41-50세	1(1.3)	1(1.3)	11(14.1)	51(65.4)	14(17.9)	78(100.0)		
	51세이상	0(0)	1(9)	7(21.0)	18(51.4)	9(25.7)	35(100.0)		
학력수준	고교졸업	0(0)	3(2.6)	45(36.8)	57(48.7)	15(12.0)	120(100.0)	91.215 df=24 p< .001	
	전문대졸	4(4.1)	14(14.3)	11(11.2)	57(58.2)	12(12.2)	98(100.0)		
	4년제대졸	0(0)	6(5.1)	11(9.3)	73(61.9)	28(23.7)	118(100.0)		
	대학원졸	0(0)	1(2.2)	0(0)	31(67.4)	14(30.4)	46(100.0)		
교육경력	대학교재학	5(2.5)	21(10.0)	37(18.5)	108(54.0)	30(15.0)	210(100.0)	47.540 df=21 p< .001	
	없음	3(1.3)	13(5.5)	54(22.7)	127(53.4)	41(17.2)	238(100.0)		
	5년미만	5(2.8)	24(13.6)	29(16.5)	93(52.8)	25(14.2)	176(100.0)		
	5-10년	1(1.2)	6(7.4)	13(16.0)	49(60.5)	12(14.8)	81(100.0)		
	11-15년	0(0.0)	0(0.0)	6(19.4)	21(67.7)	4(12.9)	31(100.0)		
직업 및 신분	16년이상	0(0.0)	1(5.6)	2(11.2)	36(64.2)	17(30.4)	56(100.0)	63.343 df=16 p< .001	
	직업	예비교사	5(2.6)	21(10.2)	36(18.4)	109(55.6)	26(13.3)		196(100.0)
	영유아교원	4(2.3)	18(10.2)	22(12.4)	103(58.2)	30(16.9)	177(100.0)		
	장학사	0(0)	0(0)	1(4.0)	14(56.0)	10(40.0)	25(100.0)		
	학부모	0(0)	1(1.7)	4(6.9)	33(56.9)	21(34.5)	58(100.0)		
신분	북한이탈주민	0(0)	5(4.0)	41(32.5)	67(53.2)	13(10.3)	126(100.0)		
전체		9(1.5)	44(7.6)	104(17.9)	326(56.0)	99(17.0)	582(100.0)		

상술한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에 있어서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연령을 볼 때 41-50세 집단에서 가장 높은 반응비율을 보였고, 20-30세 집단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었다. 둘째, 학력수준을 볼 때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기존 자격증을 교환할 때 일정한 시간의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대학원 졸업 집단에서 67.4%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고교졸업 집단에서 가장 낮은 48.7%의 반응비율을 보였다. 셋째, 교육경력을 볼 때 교육경력이 높아질수록 긍정적 반응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16년 이상 집단에서는 94.6%가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넷째, 직업 및 신분을 볼 때 긍정적 비율을 나타낸 정도는 장학사

집단에서 9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학부모, 영유아교원, 예비교사, 북한 이탈주민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반응에서 두드러진 점은 32.5%가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 북한이탈 주민 지원 방안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차세대 영유아교육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

'북한이탈 청소년들 중에서 인재를 선발하여 대학의 영유아교육 분야로 입학시켜 차세대 영유아교육 전문가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문항에 대하여 582명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비교적 낮은 긍정적 응답수준으로 볼 수 있는 3.41로 나타났다. 그동안 남북한이 각각 이질적인 교육제도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를 극복하여 적응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차세대 영유아교육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은 55.1% 수준에 머물고 있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19.1%에 이르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응비율도 25.8%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에 따른 응답자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2> 북한이탈 청소년의 차세대 영유아교육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

평정척도	N(%)						x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연령	20-30세	13(3.8)	66(19.2)	111(32.3)	133(38.7)	21(6.1)	344(100.0)	52.827 df=16 p< .001
	31-40세	1(8)	17(13.6)	23(18.4)	72(57.6)	12(9.6)	125(100.0)	
	41-50세	1(1.3)	9(11.5)	9(11.5)	50(64.1)	9(11.5)	78(100.0)	
	51세이상	3(8.6)	1(2.9)	7(21.0)	21(60.0)	3(8.6)	35(100.0)	
학력수준	고교졸업	0(0)	4(3.4)	18(15.4)	72(59.0)	26(22.2)	120(100.0)	94.251 df=24 p< .001
	전문대졸	3(3.1)	18(18.4)	32(32.7)	42(42.9)	3(3.1)	98(100.0)	
	4년제대졸	2(1.7)	22(18.6)	30(25.4)	56(47.5)	8(6.8)	118(100.0)	
	대학원졸	4(8.7)	6(13.0)	6(13.0)	25(54.3)	5(10.9)	46(100.0)	
대학교재학	9(4.5)	43(21.5)	64(32.0)	81(40.5)	3(1.5)	210(100.0)		
교육경력	없음	6(0.6)	34(14.3)	56(23.5)	114(47.9)	28(11.8)	238(100.0)	23.097 df=21 p> .05
	5년미만	6(3.4)	33(18.8)	51(29.0)	77(43.8)	9(5.1)	176(100.0)	
	5-10년	1(1.2)	14(17.3)	23(28.4)	41(50.6)	2(2.5)	81(100.0)	
	11-15년	1(3.2)	3(9.7)	8(25.8)	16(51.6)	3(9.7)	31(100.0)	
16년이상	4(7.1)	9(16.1)	12(21.4)	28(50.0)	3(5.1)	56(100.0)		

직	예비교사	10(5.1)	43(21.9)	62(31.6)	78(39.8)	3(1.5)	196(100.0)	128.325 df=16 p< .001
업	영유아교원	5(2.8)	37(21.9)	60(33.9)	69(39.0)	6(3.4)	177(100.0)	
및	장학사	3(12.0)	2(8.0)	6(24.0)	13(52.0)	1(4.0)	25(100.0)	
신	학부모	0(0.0)	8(13.8)	11(19.0)	33(56.9)	6(10.3)	58(100.0)	
분	북한이탈주민	0(0.0)	3(2.4)	11(8.7)	83(65.9)	29(23.0)	126(100.0)	
전체		18(3.1)	93(16.0)	150(25.8)	276(47.4)	45(7.7)	582(100.0)	

상술한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연령, 학력수준, 직업 및 신분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고, 교육경력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첫째 연령을 볼 때 20-30대 연령 집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긍정적 지지를 보였다. 둘째, 학력 수준을 볼 때 고교졸업 집단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고, 대학교 재학 집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긍정적 지지를 보였다. 셋째, 직업 및 신분을 볼 때 북한이탈주민 집단이 88.9%로 가장 높은 긍정적 지지를 보였고, 영유아교원 집단과 예비교사 집단에서 긍정적 지지 수준이 낮았고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비율이 각각 58.7%, 57.6%로 나타났다.

(2) 북한이탈 주민의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방안

'북한이탈 주민 중에서 교육역량이 있는 자들을 교사로 양성 및 재교육하여 영유아교사로 취업시켜 통일역군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은 어떻습니까?'라는 설문문항에 대하여 582명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비교적 낮은 긍정적 응답수준으로 볼 수 있는 3.36으로 나타났다. 역시 남북한의 서로 다른 이질적인 교육제도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를 극복하여 적응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 주민의 영유아교육 전문가 육성 및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52.2%에 불과하였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비율이 18.6%였으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비율도 비교적 높은 수준인 29.2%를 나타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에 대하여 응답자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3> 북한이탈 주민의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방안

							N(%)	
평정척도	매우아니다	아니다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x2	
연령	20-30세	17(4.9)	62(18.0)	127(36.9)	127(36.9)	11(3.2)	344(100.0)	67.370 df=16 p< .001
	31-40세	3(2.4)	13(10.4)	29(23.2)	69(55.2)	11(8.8)	125(100.0)	
	41-50세	2(2.6)	9(11.5)	8(10.3)	49(62.8)	10(12.8)	78(100.0)	
	51세이상	0(.0)	2(5.7)	6(17.1)	21(60.0)	6(17.1)	35(100.0)	
학력수준	고교졸업	0(.0)	4(3.4)	26(22.2)	62(50.4)	28(23.9)	120(100.0)	121.629 df=24 p< .001
	전문대졸	5(5.1)	18(18.4)	30(30.6)	42(42.9)	3(3.1)	98(100.0)	
	4년제대졸	4(3.4)	22(18.6)	31(26.3)	60(50.8)	1(.8)	118(100.0)	
	대학원졸	3(6.5)	6(13.0)	4(8.7)	28(60.9)	5(10.90)	46(100.0)	
교육경력	대학교재학	10(5.00)	36(18.0)	79(39.5)	74(37.0)	1(.5)	210(100.0)	36.771 df=21 p< .05
	없음	8(3.4)	27(11.3)	72(30.3)	106(44.5)	25(10.5)	238(100.0)	
	5년미만	8(4.5)	28(15.9)	65(36.9)	70(39.8)	5(2.8)	176(100.0)	
	5-10년	2(2.5)	17(21.0)	21(25.9)	38(46.9)	3(3.7)	81(100.0)	
직업 및 신분	11-15년	1(3.2)	4(12.9)	6(19.4)	19(61.3)	1(3.2)	31(100.0)	159.169 df=16 p< .001
	16년이상	3(5.3)	10(17.9)	6(10.6)	33(58.9)	4(7.1)	56(100.0)	
	예비교사	11(5.6)	35(17.9)	79(40.3)	71(36.2)	0(.0)	196(100.0)	
	영유아교원	8(4.5)	40(22.6)	52(29.4)	77(43.5)	0(.0)	177(100.0)	
분	장학사	1(4.0)	2(8.0)	3(12.0)	16(64.0)	3(12.0)	25(100.0)	58(100.0)
	학부모	2(3.4)	6(10.3)	16(27.6)	32(55.2)	2(3.4)	58(100.0)	
	북한이탈주민	0(.0)	3(2.4)	21(15.9)	70(55.6)	33(26.2)	126(100.0)	
전체	22(3.8)	86(14.8)	170(29.2)	266(45.7)	38(6.5)	582(100.0)		

상술한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고, 교육경력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첫째 연령을 볼 때 20-30세 집단에서 39.3%의 가장 낮은 긍정적 지지를 보였고, 50세 이상 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긍정적 지지를 보였다. 둘째, 학력수준을 볼 때 대학원졸 집단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고, 대학교 재학 집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긍정적 지지를 보였다. 셋째, 교육경력을 볼 때 16년 이상 경력 집단에서 가장 높게 지지하였고, 5년 미만의 집단에서 가장 낮은 지지를 보였다. 넷째, 직업 및 신분을 볼 때 북한이탈주민 집단이 81.8%로 매우 높은 수준의 긍정적 지지를 보였고, 예비교사 집단과 영유아교원 집단에서 각각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는 36.2%, 43.5%를 나타내었다. 대체적인 경향성은 경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북한이탈주민 집단에서 높은 지지를 보였고, 연령이 낮고 경력이 낮으며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낮은 지지를 보였다.

(3) 북한이탈 주민 및 청소년에 대한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비용 국가 부담여부

'북한이탈 청소년과 주민의 영유아교사 전문가 및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문항에 대하여 582명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비교적 낮은 긍정적 응답수준으로 볼 수 있는 3.62 수준으로 나타났다. 역시 남북한의 서로 다른 이질적인 교육제도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를 극복하여 적응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이탈 주민 및 청소년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비용의 국가 부담에 대한 설문문항에서 북한이탈 주민 및 청소년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방안에 대하여 설문응답자의 63.0%가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였고, 11.5%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유보적 입장을 표명한 비율은 25.4%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에 대하여 응답자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4> 북한이탈 주민 및 청소년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비용 국가 부담여부

							N(%)	
	평정척도	매우아니다	아니다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x2
연령	20-30세	9(2.7)	37(10.7)	84(24.7)	165(48.2)	49(13.7)	344(100.0)	32.478 df=16 p< .001
	31-40세	3(2.4)	16(12.8)	38(30.4)	53(42.4)	15(12.0)	125(100.0)	
	41-50세	1(1.3)	1(1.3)	15(19.2)	56(71.8)	5(6.4)	78(100.0)	
	51세이상	0(0)	0(0)	11(31.4)	21(57.1)	4(11.4)	35(100.0)	
학력수준	고교졸업	0(0)	7(6.0)	45(37.6)	57(47.0)	11(9.4)	120(100.0)	43.384 df=24 p< .001
	전문대졸	1(1.0)	13(13.3)	31(31.6)	42(42.9)	11(11.2)	98(100.0)	
	4년제대졸	2(1.7)	6(5.1)	24(21.3)	71(60.2)	15(12.7)	118(100.0)	
	대학원졸	2(4.3)	1(2.2)	7(15.2)	31(67.4)	5(10.9)	46(100.0)	
교육경력	대학교재학	8(4.0)	27(13.5)	41(21.5)	93(46.5)	31(15.5)	210(100.0)	26.582 df=21 p> .05
	없음	6(2.5)	23(9.7)	70(29.4)	109(45.8)	30(12.6)	238(100.0)	
	5년미만	3(1.7)	18(10.2)	36(21.5)	97(55.1)	22(12.5)	176(100.0)	
	5-10년	2(2.5)	10(12.3)	26(32.1)	34(42.0)	9(11.1)	81(100.0)	
직업 및 신분	11-15년	1(3.2)	1(3.2)	9(29.0)	13(41.9)	7(22.6)	31(100.0)	23.221 df=16 p> .001
	16년이상	1(1.8)	2(3.6)	7(12.5)	41(73.2)	5(8.9)	56(100.0)	
	예비교사	8(4.1)	25(12.8)	44(22.4)	91(46.4)	28(14.3)	196(100.0)	
	영유아교원	3(1.7)	17(9.6)	44(24.9)	89(50.3)	24(13.6)	177(100.0)	
신분	장학사	0(0)	2(8.0)	3(12.0)	17(68.0)	3(12.0)	25(100.0)	58(100.0)
	학부모	2(3.4)	5(8.6)	15(25.9)	31(53.4)	5(8.6)	58(100.0)	
	북한이탈주민	0(0)	5(4.0)	42(33.3)	66(52.4)	13(10.3)	126(100.0)	
전체		13(2.2)	54(9.3)	148(25.4)	294(50.5)	73(12.5)	582(100.0)	

상술한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볼 때 연령, 학력수준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고,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볼 때 51세 집단에서 가장 높게 지지하였고, 20-30세 집단에서 가장 낮게 지지하였다. 둘째,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지지를 보였다.

(4) 영유아교사 자격증 취득 후 남한사회 이해를 위한 수습기간의 필요성

'북한이탈 청소년과 주민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영유아교사로 취업하는 경우 남한사회의 충분한 이해와 적응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문항에 대하여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남한사회를 위한 수습기간에 대하여 37.8%가 1년 이상으로 반응하였고, 35.9%가 2년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21.6%가 6개월에서 1년으로 응답하였다. 수습기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미만의 낮은 수준인 .07%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직업 및 신분에서만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고,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5> 영유아교사 자격증 취득 후 남한사회 이해를 위한 수습기간의 필요성

							N(%)	
구분		불필요	6개월미만	6개월-1년	1년이상	2년이상	전체	χ^2
직업 및 신분	예비교사	1(0.5)	9(4.6)	36(18.4)	71(36.2)	79(40.3)	196(100.0)	29.625 df=16, p< .05
	영유아교원	1(0.6)	5(2.8)	42(23.7)	59(33.3)	70(39.5)	177(100.0)	
	장학사	0(0.0)	0(0)	4(16.0)	14(56.0)	7(28.0)	25(100.0)	
	학부모	0(0.0)	0(0)	11(19.0)	21(34.5)	27(46.6)	58(100.0)	
북한이탈주민	2(1.6)	9(7.1)	33(26.2)	56(44.4)	26(21.6)	126(100.0)		
전체		4(0.7)	23(4.0)	126(21.6)	221(37.8)	219(35.9)	582(100.0)	

상술한 바와 같이 직업 및 신분에 따른 차이를 볼 때 학부모들의 46%가 2년 이상의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21.6%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5) 북한이탈 주민 및 청소년 출신 교사에 대한 신뢰 정도

'북한이탈 청소년 및 주민이 영유아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수습기간을 거쳐 남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로 취업할 경우 귀하여 자녀를 편안하게 맡길 수 있습니까?'라는 설문문

항에 대하여 582명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매우 낮은 긍정적 수준으로 볼 수 있는 3.04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 주민 및 청소년 출신 영유아교사에 대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신뢰수준은 겨우 35.7% 수준에 머물고 있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7.0%에 이르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반응비율도 36.3%나 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에 따른 응답자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6> 북한이탈 주민 및 청소년 출신 교사에 대한 신뢰 정도

평정척도	N(%)						x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연령	20-30세	30(8.7)	88(25.6)	137(39.8)	81(25.3)	8(2.6)	344(100.0)	54.183 df=16 p< .001
	31-40세	7(5.6)	15(12.0)	45(36.0)	51(40.8)	7(5.6)	125(100.0)	
	41-50세	3(3.8)	14(17.9)	18(23.1)	40(51.3)	3(3.8)	78(100.0)	
	51세이상	1(2.9)	5(14.3)	11(31.4)	16(45.7)	2(5.7)	35(100.0)	
학력수준	고교졸업	2(1.7)	14(12.0)	25(21.5)	67(55.6)	12(10.3)	120(100.0)	103.047 df=24 p< .001
	전문대졸	5(5.1)	23(23.5)	46(46.9)	22(22.4)	2(2.0)	98(100.0)	
	4년제대졸	5(4.2)	28(23.7)	52(44.1)	33(28.0)	0(0)	118(100.0)	
	대학원졸	4(8.7)	4(8.7)	12(26.1)	23(50.0)	3(6.5)	46(100.0)	
대학교재학	25(12.5)	53(26.5)	76(38.0)	43(21.5)	3(1.5)	210(100.0)		
교육경력	없음	12(5.0)	43(18.1)	88(37.0)	82(34.5)	13(5.5)	238(100.0)	36.369 df=21, p< .05
	5년미만	21(11.4)	46(26.1)	72(40.9)	36(21.5)	2(1.1)	176(100.0)	
	5-10년	6(7.4)	16(19.8)	28(34.6)	29(35.8)	2(2.5)	81(100.0)	
	11-15년	1(3.2)	6(19.4)	8(25.8)	15(48.4)	1(3.2)	31(100.0)	
16년이상	2(3.6)	11(20.0)	15(26.8)	26(46.4)	2(3.6)	56(100.0)		
직업 및 신분	예비교사	23(11.7)	54(27.6)	76(38.8)	40(21.4)	3(1.5)	196(100.0)	125.667 df=16, p< .05
	영유아교원	13(7.3)	49(27.7)	73(41.2)	41(23.2)	1(6)	177(100.0)	
	장학사	1(4.0)	2(8.0)	8(32.0)	13(52.0)	1(4.0)	25(100.0)	
	학부모	3(5.2)	8(13.8)	27(46.6)	21(34.5)	0(0)	58(100.0)	
북한이탈주민	1(8)	9(7.1)	27(21.4)	74(58.7)	15(11.9)	126(100.0)		
전체	41(7.0)	122(21.0)	211(36.3)	188(32.3)	21(3.4)	582(100.0)		

상술한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연령을 볼 때 41-50세 집단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고, 20-30대 집단에서 가장 낮은 지지를 보였다. 둘째, 학력수준을 볼 때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고, 대학교 재학 집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지지를 보였다. 셋째, 교육경력을 볼 때 대부분의 경력 집단에서 비슷한 지지를 보였고, 5년 미만의 집단에서 가장 낮은 지지를 보였다. 넷째, 직업 및 신분을 볼 때 북한이탈

주민 집단이 70.0%로 가장 높은 수준의 긍정적 지지를 보였고, 예비교사 집단과 영유아교원 집단에서 각각 낮은 수준인 21.9%, 23.8%를 나타내었다.

3) 남북한 영유아교육 현장의 교류, 협력, 지원

(1) 남북한 영유아교육 현장의 교류, 협력, 지원의 필요성

'북한의 영유아교육 현장에 대한 교류, 협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문항에 대하여 582명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 응답비율인 평균 3.98로 나타났다. 이는 남북한의 유아교육 현장이 어떤 형태로든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며, 지원하는 것이 통일한국을 위해 필요한 과정임을 말해주는 증거로 사료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에 따른 응답자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7> 남북한 영유아교육 현장의 교류, 협력, 지원의 필요성

평정척도	N(%)					전체	x2
	매우 아니다	아니다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연령	20-30세 3(0)	10(0)	60(0)	219(0)	62(0)	344(100.0)	21.046
	31-40세 0(0)	1(8)	17(13.6)	83(66.4)	24(19.2)	125(100.0)	df=16
	41-50세 0(0)	2(2.6)	3(3.8)	57(73.1)	16(21.5)	789(100.0)	p> .05
	51세이상 1(2.9)	2(5.7)	2(5.7)	21(60.0)	9(25.7)	35(100.0)	
학력수준	고교졸업 0(0)	4(3.4)	22(18.8)	80(65.8)	14(12.0)	120(100.0)	25.233
	전문대졸 0(0)	1(1.0)	13(13.3)	67(68.4)	17(17.3)	98(100.0)	df=24
	4년제대졸 0(0)	2(1.7)	14(11.9)	77(65.3)	25(21.2)	118(100.0)	p> .05
	대학원졸 1(2.2)	2(4.3)	1(2.2)	28(60.9)	14(30.4)	46(100.0)	
	대학교재학 3(1.5)	6(3.0)	32(16.0)	118(59.0)	41(21.5)	210(100.0)	
교육경력	없음 3(1.3)	4(1.7)	39(16.4)	150(63.0)	42(17.6)	238(100.0)	29.018
	5년미만 0(0)	7(4.0)	29(16.5)	109(61.9)	31(17.6)	176(100.0)	df=21,
	5-10년 0(0)	1(1.2)	9(11.1)	57(70.4)	14(17.3)	81(100.0)	p> .05
	11-15년 0(0)	2(6.5)	4(12.9)	21(67.7)	4(12.9)	31(100.0)	
	16년이상 1(1.8)	1(1.8)	1(1.8)	33(58.9)	20(35.7)	56(100.0)	
직업	예비교사 3(1.5)	6(3.1)	32(16.3)	116(59.2)	39(19.9)	196(100.0)	
	영유아교원 0(0)	3(1.7)	22(12.4)	114(64.4)	38(21.5)	177(100.0)	22.215
및	장학사 0(0)	1(4.0)	1(4.0)	13(52.0)	10(40.0)	25(100.0)	df=16,
신	학부모 0(0)	3(5.2)	7(12.1)	39(67.2)	9(15.5)	58(100.0)	p> .05
분	북한이탈주민 1(8)	2(1.6)	21(15.9)	88(69.8)	15(11.9)	126(100.0)	
전체	4(7)	15(2.6)	82(14.1)	370(63.6)	111(19.1)	582(100.0)	

상술한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남북한 영유아교육 현장의 교류, 협력,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문항의 분석결과 82.7%가 긍정적인 반응비율은 보였고, 3.3%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14.1%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한 설문문항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과를 볼 때 연령, 학력수준, 교육경력, 직업 및 신분에 따른 분석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교류, 협력, 지원의 필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 남북한 영유아교육 분야의 교류, 협력, 지원의 방식

'남북한의 영유아교육 분야에서 교류, 협력, 지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비율을 볼 때 1순위는 교육계획안의 상호교류와 학술교류 및 협력도모로 나타났고, 2순위는 교육기자재지원으로 나타났으며, 3순위는 전공학생 상호교류와 영유아들의 상호교류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8> 남북한 영유아교육 분야의 교류, 협력, 지원의 방식(연령)

교류, 협력, 지원의 방식	N(%)				
	20-30세	31-40세	41-50세	51세이상	전체
전공학생상호교류	44(13.1)	8(6.4)	3(3.8)	2(5.7)	57(9.8)
영유아들의상호교류	39(11.3)	6(4.8)	9(11.5)	2(5.7)	56(9.6)
교육계획안등상호교류	97(28.3)	30(24.0)	10(12.8)	6(17.1)	143(24.6)
학술교류및협력도모	77(22.6)	33(26.4)	21(25.6)	11(31.4)	141(24.2)
인도적지원	27(7.1)	11(8.8)	10(12.8)	1(2.9)	49(8.4)
교육기자재지원	55(16.1)	37(29.6)	24(30.8)	12(34.3)	128(22.0)
기타	5(1.5)	0(0)	2(2.6)	1(2.9)	8(1.4)
전체	344(100.0)	125(100.0)	78(100.0)	35(100.0)	582(100.0)
x ²			52.394	df=24,	p< .001

상술한 바와 같이 연령에 따른 분석결과를 볼 때 20-30세 집단에서는 현장 영유아교원들의 교수방법, 교육계획안 등의 상호교류, 영유아교육 분야의 학생, 전문가들의 학술교류 및 협력도모에 대하여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31-40세, 41-50세, 5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북한 영유아교육 기관에 대한 교구, 교재 및 컴퓨터 등의 교육기자재 지원 방식에 대하여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연령에 따른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경향성은 젊은 연령층에서는 상호교류 방식을 더 선호하였고, 41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현실적인 지원방식을 더 선호하였다.

<표 29> 남북한 영유아교육 분야의 교류, 협력, 지원의 방식(학력수준)

교류, 협력, 지원의 방식	N(%)					
	고교졸업	전문대졸	4년제대졸	대학원졸	대학교재학	전체
전공학생상호교류	3(2.6)	7(7.1)	7(5.9)	2(4.3)	38(19.0)	57(9.8)
영유아들의상호교류	6(5.1)	7(7.1)	7(5.9)	4(8.7)	32(16.0)	56(9.6)
교육계획안상호교류	8(6.8)	24(24.5)	45(38.1)	14(30.4)	52(26.0)	143(24.6)
학술교류및 협력도모	17(13.7)	27(27.6)	30(25.4)	21(45.7)	46(23.0)	141(24.2)
인도적지원	26(22.2)	6(6.1)	6(5.1)	2(4.3)	9(4.5)	49(8.4)
교육기자재지원	58(47.9)	27(27.6)	22(18.6)	2(4.3)	19(9.5)	128(22.0)
기타	2(1.7)	0(0.0)	1(0.8)	1(2.2)	4(2.0)	8(1.4)
전체	120(100.0)	98(100.0)	118(100.0)	46(100.0)	210(100.0)	582(100.0)
x2			179.887	df=36,	p< .001	

남북한 영유아교육 분야의 교류, 협력, 지원방식에 대하여 학력수준에 따른 분석결과를 볼 때 고교졸업 집단에서는 교육기자재 지원, 인도적 지원에 높은 반응비율을 보였고, 전문대졸업 집단에서는 학술교류 및 협력도모, 교육기자재 지원을 가장 선호하였다. 4년제졸 집단, 대학교재학 집단에서는 교수방법 및 교육계획안 상호교류 방식을 선호하였고, 대학원졸 집단에서는 학술교류 및 협력도모 방식을 선호하였다. 학력수준에 따른 분석결과의 경향성은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교수방법 및 교육계획안 상호교류, 학술교류 및 협력도모 방식을 더 선호하였고,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0> 남북한 영유아교육 분야의 교류, 협력, 지원의 방식(교육경력)

교류, 협력, 지원의 방식	N(%)					전체
	없음	5년미만	5-10년	11-15년	16년이상	
전공학생상호교류	38(16.0)	13(7.4)	2(2.5)	1(3.2)	3(5.4)	57(9.8)
영유아들의상호교류	19(8.0)	19(10.8)	10(12.3)	2(6.5)	6(10.7)	56(9.6)
교육계획안상호교류	49(21.6)	58(33.0)	15(18.5)	8(25.8)	13(23.2)	143(24.6)
학술교류및 협력도모	48(21.2)	37(21.0)	26(32.1)	8(25.8)	22(39.3)	141(24.2)
인도적지원	24(10.1)	11(6.3)	9(11.1)	2(6.5)	3(5.4)	49(8.4)
교육기자재지원	59(24.8)	34(19.3)	19(23.5)	8(25.8)	8(14.3)	128(22.0)
기타	1(4)	4(2.3)	0(0)	2(6.5)	1(1.8)	8(1.4)
전체	238(100.0)	6(100.0)	81(100.0)	31(100.0)	56(100.0)	582(100.0)
x2			57.210	df=30,	p< .001	

남북한 영유아교육 분야의 교류, 협력, 지원방식에 대하여 교육경력에 따른 분석결과를 볼 때 교육경력이 없는 집단에서는 교육기자재지원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고, 5년미만,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21년 이상 경력 집단에서는 학술교류 및 협력도모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수방법 및 교육계획안 상호교류, 교육기자재 지원 방식을 선호하였다. 교육경력에 따른 분석에서의 경향성은 교육경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학술교류 및 협력도모 방식을 더 선호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31> 남북한 영유아교육 분야의 교류, 협력, 지원의 방식(직업 및 신분)

교류, 협력, 지원의 방식	N(%)					
	예비교사	영유아교원	장학사	학부모	북한이탈주민	전체
전공학생상호교류	37(18.9)	10(5.6)	2(8.0)	6(10.3)	2(1.6)	57(9.8)
영유아들의상호교류	33(16.8)	15(8.5)	1(4.0)	4(6.9)	3(2.4)	56(9.6)
교육계획안상호교류	57(29.1)	53(29.9)	7(28.0)	169(27.6)	10(7.9)	143(24.6)
학술교류및 협력도모	41(21.9)	55(31.1)	12(48.0)	15(25.9)	18(14.3)	141(24.2)
인도적지원	8(4.10)	11(6.21)	0(0)	2(3.4)	28(22.2)	49(8.4)
교육기자재지원	16(8.2)	32(18.1)	2(8.00)	13(22.4)	65(51.6)	128(22.0)
기타	4(2.0)	1(0.6)	1(4.0)	2(3.4)	0(0)	8(1.4)
전체	196(100.0)	177(100.0)	25(100.0)	58(100.0)	126(100.0)	582(100.0)
x2	195.618 df=24, p< .001					

남북한 영유아교육 분야의 교류, 협력, 지원의 방식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직업 및 신분 특성에 따라 볼 때 예비교사, 학부모 집단에서는 교수방법 및 교육계획안 상호교류를 가장 선호하였고, 영유아교원, 장학사 집단에서는 학술교류 및 협력도모 방식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응답결과에서는 교육기자재 지원과 인도적 지원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설문 대상자가 북한에서 직접 태어나 학교를 다니고 성장하여 최근에 북한을 이탈한 집단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직접적인 지원방식임을 말해주는 하나의 증거로 사료된다.

VI. 결 론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영유아교원 양성과 재교육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정한 세 가지 연구문제는 첫째, '통일한국의 영유아 교원교육 제도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고, 둘째, 북한이탈

인적자원의 영유아교육 전문가 육성 및 취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셋째, 남북한 영유아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과 교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이러한 연구문제에 따라 고찰한 모색한 몇 가지 영유아 교원교육 제도 및 정책 방향을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결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통일한국의 영유아 교원교육 제도 및 정책의 방향을 모색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영유아 교원교육 제도 및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그동안 남북한에서 시행되어 온 서로 다른 양성기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교원의 질적 차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일한국의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위한 교원양성 및 재교육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영유아교사 양성에 대하여 연구에서는 유치원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유치원에 근무할 교사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4년제 이상 학사학위 수준으로 규정하였고, 2년, 3년, 4년 과정을 통하여 정원 외 편입학 등 재교육 과정을 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통일한국의 유치원교사 양성기간으로는 45%이상이 4년제 대학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 3-4년제 혼용 24.0%, 3년제 22.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보육시설(탁아소)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질적 수준을 2년제 이상 전문학사 수준으로 규정하여 1년제, 2년제 과정으로 편입학하여 재교육을 받고 학위를 취득하도록 권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3년제(32.1%), 4년제(31.1%), 2년제(24.1%) 순으로 나타났다. 즉, 통일한국의 유치원교사 양성은 4년제를 근간으로 하여 3년제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교사의 양성은 3년제와 4년제를 근간으로 하여 2년제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현직교원을 위한 재교육에 대하여 연구에서는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원래 자격증 취득 기간을 고려하여 1년, 2년, 3년의 재교육 과정을 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현직 교사들의 자기개발 노력을 인정하여 호봉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재교육 과정을 활성화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통일한국을 위한 교원양성과 재교육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는 87.6%가 지지하였다. 또한 질 높은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체계적인 양성 및 재교육과정'의 마련과 영유아교원에 대한 '임금 및 처우개선'이라고 하였다.

셋째, 교원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에 대하여 연구에서는 영유아 교육에 필요한 보편적인 전공과목을 기본으로 하여 글로벌 시대의 인간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일반선택과목, 실습과목 등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민주시민교육한 보편적이해 교육한 평화교육한 민족공동체의식교육한 다문화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평을 제시하였다. 통일 한국의 교원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내용요소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25.9%가 '보편적인상호 이해교육'을 가장 중요시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다문화반편견교육한 심리정서교육한 민족공동체의식교육 등을 중요시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유아교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설문 대상자의 22.9%가 올바른 인성을 가장 중요시 하였고, 이어서 포용력(22.1%), 다문화주의(15.8%)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밖에 영유아교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로는 투철한 교육관, 교수-학습능력, 관용의 배품 등으로 나타났다.

2. 북한이탈 인적자원의 영유아교육 전문가 육성 및 취업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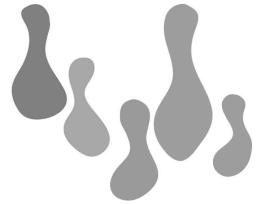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인적자원의 영유아교육 전문가 육성 및 취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하나는 성인들 중에서 교육력이 있는 자를 발굴하여 영유아교육 전문가로 육성하여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영유아교육 양성 전문기관에 입학시킨 후 멘토과정을 두어 조력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영유아 교육기관으로 취업시켜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들을 남한의 영유아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통일한국의 영유아교육 분야에서 역군으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차세대 영유아교육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한 비율이 55% 수준에 불과하였다. 연령이 많은 집단보다는 낮은 집단에서 더 높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탈 성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반응비율이 52.2%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응답 비율은 81.8%라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북한이탈 청소년이나 주민들이 영유아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과정을 위하여 수습 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37.8%가 1년 기간을 선택하였고, 35.9%는 2년의 기간을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자신의 자녀를 북한이탈 주민 및 청소년 출신 영유아교사에 대한 신뢰 정도는 겨우 35.7% 수준에 머물고 있다.

3. 남북한 영유아교육 현장지원과 상호교류 기회 확대 방안 모색

북한에 대한 초창기의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긴급구호 형태로 이루어져 오다가 2000년 들어서는 교과서를 위한 종이지원, 학용품, 교육기자재 지원, 학교시설의 개보수 등의 교육물자 지원 중심의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유아교육분야에서도 상호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이해의 공감대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유아교육기관을 상호방문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영유아교육 전문가들의 교육방법, 교육계획안의 교류 등을 통하여 공동연구를 할 수도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는 남북한 영유아교육 현장의 교류, 협력,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82.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영유아교육 분야의 교류, 협력, 지원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24.6%가 '교수방법 및 교육계획안 등의 상호교류', 24.2%가 '학술교류 및 협력도모'를 가장 지지하였고, 다음으로는 22.0%가 '교육기자재의 지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영유들의 상호교류, 전공학생들의 상호교류 등으로 나타났다.

통일한국의 영유아교원 양성 및 재교육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교육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현직 교원이 교사로서의 질적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한 교육연한에 해당되는 호봉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 성인 및 청소년들에 대한 영유아교원의 육성 및 성인 방안에서도 양성 및 재교육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물론 성인과과정에서 지급되는 비용까지 모두 국가에서 통일비용 차원으로 지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남한의 학교교육이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터민 주민들에게 취업자리를 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새터민 유아교육 전문가를 고용한 영유아교육기관에게는 국가에서 월급의 전액 혹은 상당한 정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지정토론

이미정 (한국보육학회)

임희옥 (한국보육정책학회)

정선아 (한국유아교육학회)

다문화사회에서의 영유아교원양성 토론

이 미 정 (한국보육학회)

I. 서론

- 남북한은 언어와 역사가 같은 한 민족, 한 겨레이므로 언젠가는 이룩될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영유아교육의 통합을 고려하고 교육과정을 숙고한 본 논문의 의의는 매우 높ی 평가됨.
- 방대하고 우수한 본 연구에 대하여 무한한 경의를 표하며, 단지 다소 고려해 보면 보다 좋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한 제안을 하고자 함.

II. 본론

1. '통일한국의 영유아교원 양성제도 및 정책'에서의 고려사항

- 영유아교사에 관한 기본전제의 문제
 - 통일한국의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교육제도의 틀을 서로 다르게 제시한 점은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임.
 -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교사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의 3년제 교원대학을 4년제 양성과정으로 전환하고, 현재 1년제 교양원양성소에 대한 엄격한 시설과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과정을 통하여 3년제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임. 통일한국 시대의 유치원 교사의 양성은 기본적으로 학사학위 이상으로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주장하는데 비해,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현재 남한의 보육교사 양성은 1년제 보육교사교육원, 2년제 보육과, 영유아보육과, 아동복지과, 사회복지과 등, 3년제 보육과,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등, 4년제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영유아보육과, 사회복지과, 간호학과 등에서 양성하고 있음. 또한 북한에서는 보육원학교에서 운영하는 3개월, 6개월 정도의 양성과정을 통하여 보육원을 배출하고 있음. 따라서 통일한국 시대에는 현재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북한과

남한의 다양한 양성기간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 2년제 전문학사 이상의 보육교사 양성 과정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임.

- 이런 주장의 논리적 근거가 북한의 유치원교사 양성이 3년제 대학(소수의 1년제 과정 포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한국에서 북한의 유치원교사를 남한의 유치원 교원 양성체계로 그대로 흡수한다는 것이라면, 남한의 보육교사는 2년제, 3년제, 4년제, 심지어 대학원에서도 양성되고 있으므로 통일한국의 보육교사 역시 4년제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 논리에 맞음. 특히 북한의 유치원교사가 1년과정을 통해서도 양성된다는 점은 남한의 보육교사교육원의 1년과정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유치원교사였다는 사실만으로 남한의 유치원교사와 같은 과정으로 단순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통일한국에서 남북한 영유아교사의 통합에 대해 논하기 전에, 유치원교사는 4년제 학사 학위를 기본으로 하고 보육교사는 2년제 전문학사를 기본 양성과정의 근간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설정을 납득시킬만한 논리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는 영유아교사에 대한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주장임.
-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해묵은 이중적 자세를 다시 확인하는 것 같아 유감
유아교육계에서 유·보 통합을 목소리 높여 주장할 때는, 유치원이든 보육시설이든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같은 아이들이니 보육과 유아교육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증의 통합 문제 등의 사안에서는 유·보 통합의 주장이 자취를 감추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부분임.
- 경쟁없는 닫힌 사회가 더 위험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더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주장은 과연 사실인가? 보육시설 평가인증과 서울형 어린이집 등의 일련의 제도적 평가체계와 평가결과의 적용을 실시해 가고 있는 보육현장과 자율장학 및 불분명한 평가적용과정을 지닌 교육청 평가체계를 유지하는 유치원 중 어느 집단이 과연 우수한 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는 의문임. 평가 결과에 따른 제재조치가 불분명한 평가과정은 장기적으로 그 질을 보장할 수 없음.
- 남북한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교육내용비교
발제자는 본문에서 '남북한 보육교사(보육원)의 양성과정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남북한 모두 보육교사 양성과정에는 교직과목이 빠져있다는 점이다'라고 제시하여, 남북한 공히 보육교사(보육원)들만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는 것으로 언급함. 그러나 각 양성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표1 참조), 교직과목이 설치된 양성과정은 남한의 유치원과정에 한정된다. 즉, 북한에서는 유치원(교양원)교사들도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있음. 오히려 남한의 보육교사의 경우, 3년제, 4년제, 대학원 등에서

대부분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있으며, 특히 보육학과 및 아동학과의 경우 같은 교육과정 내에서 유치원 자격증의 일부(10%) 취득이 가능하므로 보육교사들도 전원 유치원과정과 동일한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남북한의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공통점으로 제시한 교직과목 누락은 오류이며, 남한의 보육교사는 교직과목 이수에 보다 근접해 있는 집단이라고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교양원과 남한 유치원교사를 동일 집단으로 동일시하고 북한 보육원과 남한 보육교사를 같은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없음.

- 통일한국에서의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양성과정 프로그램 비교

발제자는 본문에서 통일한국에서의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각각 제시하고, 이들 프로그램 안에서 각 교과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각각 제시하고 있음.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음.

<표 1> 본문에 제시된 영유아교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양성과정 교사	현재 양성과정 프로그램	통일한국에서의 양성과정 프로그램 ¹⁾	통일한국에서의 양성과정 프로그램 교과목에 포함해야 할 내용 ²⁾
남한 유치원교사	교양과목, 교직과목, 전공과목, 실습과목 ³⁾	전공과목, 교양과목, 교직과목, 실습과목, 일반선택과목	민주시민교육, 남북한이해교육, 평화교육, 민족공동체의식 증진교육, 전통문화 교육, 기본생활습관 교육, 다양한 체험교육, 다문화교육, 반편견교육, 교원평가, 유치원 평가
북한 유치원(교양원)	정치사상과목, 교양과목, 전공과목, 실습과목		
남한 보육교사	교양과목, 전공과목, 실습과목 ⁴⁾	전공과목, 교양과목, 교직과목, 실습과목	민주시민교육, 남북한이해교육, 평화교육, 민족공동체의식 증진교육, 전통문화 교육, 기본생활습관 교육, 다양한 체험교육, 다문화교육, 반편견교육, 교원평가, 보육시설 평가
북한 보육(보육원)	보육교양과목, 정치사상과목, 실습과목		

1) 굵은 글씨로 쓰여진 부분은 통일한국에서의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과정 프로그램 중 서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임.
 2) 굵은 글씨로 쓰여진 부분은 통일한국에서의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과정 교과목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서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다. 그러나 유치원평가와 보육시설평가는 내용적으로 동일함.
 3) 본문에서는 이와같이 분류했으나, 아래 남한 보육교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제시한 분류대로 한다면, 교직과목, 전공기본이수과목이 되고, 교직과목 안에 실습과목이 포함됨. 따라서 위 표에는 본문에 제시된 남한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양성프로그램의 분류를 본 토론자가 같은 기준으로 통일하여 제시함.

그러나 <표1>에서 보듯이, 발제자가 주장한 통일한국에서의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과정 프로그램 중 서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일반선택과목이 유일한데, 일반선택과목이란 말 그대로 전공과 큰 관련이 없는 일반과목의 선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발제자가 주장한 통일한국에서의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과정 프로그램은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발제자가 제시한 통일한국에서의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과정 프로그램 교과목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민주시민교육, 남북한이해교육, 평화교육, 민족공동체의식 증진교육, 전통문화 교육, 기본생활습관 교육, 다양한 체험교육, 다문화교육, 반편견교육, 교원평가, (유치원 및 보육시설) 평가'로 정확하게 일치함(표1 참조).

결국, 본문에서 발제자가 제시한 통일한국에서의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과정 프로그램과 그 교과목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그렇다면, 통일한국에서의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동일한 자격과 소양을 갖춘 직업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한국에서의 유치원교사 양성과정은 4년제 학사를, 그리고 보육교사 양성과정은 2년제 전문학사를 근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동의할 수 없음.

□ 대안

- 유치원·보육교사의 학력은 공히 단계적으로 학사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점진적으로 유치원·보육교사의 자격을 3년제 이상의 학력으로 조정하며, 장기적으로 학사 이상으로 강화함.
- 현재 유치원과 보육교사의 자격을 주고 있는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은 전문대학 또는 기존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배출된 교사의 학력 고양을 위한 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북한의 영유아교원에 대한 양성과정도 이와 동일하게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2. '북한이탈 인적자원의 영유아 교육현장 취업과 재교육 방안'에서의 고려사항

- 북한 이탈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들의 취업과 남한사회에의 적응을 돕고자 한
본고의 의도는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시도들은 통일한국을 대비하는데
매우 의미있는 접근이라고 판단되며, 각 분야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이 많이 이루어

4) 본문에서는 보육기초과목, 발달 및 지도과목, 영유아교육과목, 건강 영양 및 안전과목,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과목, 보육실습과목으로 제시했으나, 이는 이수교과목 분류로 언급한 것이고 이를 유치원과 같은 분류로 하면 교양과목, 전공과목, 실습과목으로 분류됨.

- 질 때 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교사'라는 직업은 다른 직종과 달리 어린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다 심각하게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함.
 - 먼저 북한이탈자들의 탈북 동기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면적으로는 북한이 싫어서 탈북했다고 분류되지만 구체적으로 북한의 어느 부분이 싫었는지는 반드시 파악해야 할 요소임. 보통, 탈북동기 중 보다 강력한 동기는 의식주 등의 경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음(북한은 실제 굶어서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때, 이들이 탈북하여 남한으로 왔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의 사상도 모두 혐오하고 남한의 가치관에 동조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인간의 특성상 어린 시절부터 받아들였던 가치관과 사상의 부분은 잘 변화되지 않고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그 속도는 매우 느림. 그러므로 탈북민의 가치관은 남한 사람들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보편가치와 매우 다를 가능성이 크고 대부분 상당기간이 지나도 상당한 정도의 가치관 혼란을 느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교사', 특히 모든 것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영유아기 아동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영유아교사는 더욱 어린 아동들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 이므로 북한 이탈자를 교사로 채용하는데는 문제의 소지가 있음. 영유아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음.
 - 남한은 민주적 다원주의 사회의 성격을 지니지만, 북한은 아직 매우 경직된 독재적 획일적 사회임을 간과하지 않을 필요 있음.
 - 그러므로, 북한 이탈자들을 자문역할자로 활발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무리가 적은 방안으로 판단됨. 이러한 제안은 본고의 실증조사 자료에서 북한 이탈자교사에게 아이를 맡기는데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결과에 의해서 지지됨.

3. '통일한국의 영유아교원 교육제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에서의 고려사항

- 설문조사 대상자 표집에서의 고려사항
표집 대상의 구체적인 분포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예를들어 영유아교원과 예비교사의 cell에서 각각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분포, 그리고 유아교육과와 기타학과 학생의 분포가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올 수 있음. 만약에 유아교육과 학생과 유치원교사의 비율이 보육교사나 보육관련학과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면, 가령 유치원교사 양성과정은 4년제, 보육교사 양성과정은 2년제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많을 수 있음. 그러나 만약 보육종사자가 많이 설문조사에 포함되었다면 그 결과는 사뭇 달라졌을 것임. 그러므로 조사 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여지 있음.
- 설문대상자의 집단 크기 차이가 너무 커서 일부 결과는 대표성을 지닌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음. 특히 장학사 집단은 100% 유아교육관련자이고 너무 소수이므로 문항에 따라서는 1명의 응답도 결과로 간주되어 일반화의 문제를 언급할 수 있음. 만약에, 장학사를 직업 및 신분 집단의 하나로 분류하였으면 그 집단 안에 보육관련 공무원 및 행정담당자가 포함되어야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III. 결론

-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한 관계의 역동적인 변화를 겪는 현실에서 우리 한민족의 통일을 숙고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촉구한 본 연구의 접근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사료됨. 방대한 내용을 설문조사하고 남북한이 한민족 공동체로서 서로 융합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위한 협력 방안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님을 인정함.

영유아교원과 유아교육현자의 통일을 위한 준비

임 희 옥 (한국보육정책학회)

국가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 문화관광부까지 정부 각 부처가 다문화가정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다문화가정 관련 사업은 국제결혼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2007년 여성부의 사업보고서에는 다문화가정을 국제결혼가정으로 정의하였지만 보고서 말미에는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에 관한 자료를 약간 첨부한 정도이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서로 상이한 문화를 소유한 가족구성원으로 구성된 가정이라면 사실 모든 가정은 다문화가정입니다. 성별과 성장배경과 학교교육의 차이와 함께 사회와 결혼에 대한 기대까지 철저히 다른 구성원의 집합입니다. 토론자는 2008년 다문화가정동화를 집필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던 중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으로 인한 가정 이외에도 입양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보육원 시설과 새터민 가정이 다문화가정의 범주에 들어가야 함을 인식하고 집필 한바 있습니다.

연구자가 '다문화 사회에서 육아지원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라는 포럼의 주제로 통일교육과 새터민을 선택한 것은 앞서가는 안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원고를 읽으며 오래전부터 북한이탈주민과 통일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토론자로서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흥미 있는 주제였습니다.

1. 다문화가정으로서의 새터민

2002년 이후부터 우리 사회에는 매해 1,000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들어와 2009년 3월 15,631명(여자가 66%)¹⁾이 전국 각지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이탈주민을 소재로 하는 영화가 제작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이 용광로 정책에서 샐러드볼 정책으로 전환한 전례를

1) 통일부 통일교육원 자료 국회도서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110만이 넘는 국내 거주 외국인, 125만에 육박하는 한부모 가족과 전체결혼의 11%가 넘는 36,000여건의 국제결혼에 비하면 이제 만명을 넘어선 새터민 문제는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처럼 급작스럽게 통일이 될 경우 북한주민과의 문화적 충돌의 문제는 국제결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숫자적인 문제입니다. 통일에 대한 준비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연구자의 지적은 결코 지나친 우려가 아닙니다.

특히 통일한국에서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보육과 교육 분야에서 종사할 교원 양성에 대한 제도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 논문은 참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심리적 충격을 당할 북한의 영유아교사'를 거론하셨지만 토론자는 남한의 영유아교사 역시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가 아닌데도 외국어처럼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외모가 같은데도 전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북한의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교직활동을 전개할 교사의 정신적 부담 역시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점진적인 대안으로 '교육 현장의 피해와 충격을 최소화 하고 교육의 본연의 자리매김이 가능하도록 교사 훈련과 교육 현장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예비교사 및 교사들을 위한 구체적인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와 새터민들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모색이 활발해져야 할 것입니다.

2. 국가와 민간단체의 새터민 지원정책

국가의 새터민지원 정책이 정착기본금을 감액하고 취업장려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은 토론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새터민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연구가 필수적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새터민들의 정착을 지원하던 <하나원>의 12주 420시간 교육을 통해 가정체험, 컴퓨터교육, 진로희망 찾기 등의 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훈련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새터민 지역적응센터>는 2003년부터 자립 자활, 학습문화 지원, 합동결혼식 등의 사업을 하며 3주 6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센터>에서는 은행업무, 쓰레기 분리 수거, 교육과 취업지원을 교육하며 경기도2청사에 있는 <북한 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에서는 6월부터 11월까지 직업훈련과정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인 실업인회와 협력교회의 기독교실업인들도 새터민들의 직업훈련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직은 주로 기술직 훈련에 집중되고 있지만 점차 교직 분

아에도 이들의 참여가 중요할 것입니다.

<하늘꿈 학교>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기독교대안학교로서 연고가 없는 청소년들도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함께 자원봉사 할 교사를 찾고 있습니다.²⁾ 이들을 중심으로 교사양성을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북한인권시민연합의 <한겨레 계열학교>는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사회적응을 돕는 계절형 대안학교입니다. 3주간 숙식과 함께 현직 교사들이 함께 상주하며 야간자율학습까지 지도합니다. 올 여름 방학 때 벌써 17회째 개최하였습니다.

국가 역시 새터민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확대 시행지침'을 내려 외국인·새터민 공무원 채용 확대하고 특히 새터민도 집중 거주지 관할 지자체 공무원뿐 아니라 취업안내 상담요원 등으로 채용토록 했습니다.³⁾

통일부 대변인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6개의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단을 통해 일대일 상담과 봉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산하 (재)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국민들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봉사단 워크숍 및 경진대회로 확대 발전시켜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3. 통일교육 방향

통일부는 1999년 2월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을 2008년 12월 일부개정하면서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으로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으로 설정하였습니다.⁴⁾ 2009년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학교용 통일교육지침서를 발간하였는데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 극복, 통일의 당위성 인식과 통일의지 확립, 통일시대 대비 역량강화의 세 가치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통일교육의 과제로는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 의식 함양,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다섯 가치를 들고 있습니다.⁵⁾ 연구자의 말처럼 통일부의 통일교육 자료에는 유아교육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연구자는 같음을 찾는 전통교육과 다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반편견교육과정의 접근법을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토론자도 노출단계 후에 서로 편안함을 느끼는 단계, 서로 감

2) 하늘꿈 학교 <http://www.hdschool.org/>

3) 박석원기자 spark@hk.co.kr 한국일보

4) 통일교육원(2009). 통일백서, 통일정책과 국민적 합의. p. 200,201

5) 통일교육원(2009). 2009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pp. 15-19

정이입이 되는 단계 그리고 실천방향을 찾는 활성화단계는 합리적인 접근방법이 되리라 믿습니다. 새터민을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지원방법은 첫째 유아 자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둘째 새터민 부모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어휘를 찾아보기 위한 낱말 퍼즐(아이스 크림=얼음 보숭이, 도너츠=가락지빵), 북한어 사전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순 우리말에 가까운 북한의 단어들을 소개하면 유아들의 흥미를 끌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놀이나 제기차기처럼 같은 이름의 전통놀이가 있다는 사실에서 동질성을 확인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⁶⁾

부모교육은 이메일을 통한 부모와의 개별상담 기회를 개방하고 부모로서 남한에서 살아가는 정보들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정한 이웃으로 대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연이나 교육보다는 가까운 이웃과 친척 같은 지원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새터민들이 가능하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싶어 하는 상태에서 더 구체적인 통일교육은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오랫동안 하나원에서 주민등록을 발급받은 9000명에 가까운 새터민들이 주민등록번호의 특성 때문에 중국 비자를 받지 못하고 불편을 겪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4. 새터민 유아교사 양성의 가능성

우리의 교사 재교육은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치원교사 재교육 중에는 특수분야연수라고 해서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연수주제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연수입니다. 연수전문기관에서 특수분야 연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교육청에 신청을 하여 위탁을 받는 연수입니다. 보육교사의 재교육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특히 새터민들을 위한 혹은 통일한국에서의 교사를 위한 연수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특별한 주제의 연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0시간 중에 1-2강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구자가 제시한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 반편견교육, 교원평가 등의 여러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연수과정을 각각 설계. 제작해 두는 것은 유아교육계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북한의 유치원교양원은 북한의 직업분류상 기술자직, 노동자직, 사무원직 중에서 사무원직으로 분류됩니다. 북한에서 교양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혁명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

6) 임희옥(2008). 내 동무 정찬이. 육영닷컴.

장하고 어머니다운 품모를 갖추어야 하며, 유치원 어린이들을 문화 정서적으로 교양하고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교육하기 위한 지식과 높은 문화 예술적 소양, 풍부한 감정, 정서, 건장한 체력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혁명적 세계관을 빼고 보면 북한에서는 교사의 모성과 감정, 정서를 유치원교사의 우선적 자질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통일되기 이전에 북한에서 교직에 있던 새터민, 교직에 뜻을 둔 새터민 청소년 등을 유아교육현장의 인적자원으로서 활용하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중국 조선족으로서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입학한 학생이나 현재 영유아보육과에 재학 중인 새터민 학생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적응은 통일한국의 교육통일의 시험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자의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북한 이탈주민에게는 지지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남한에서는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물론 토론자도 인생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들의 교육 경험을 실험대상으로 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보조교사나 부담임으로 채용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안전한 투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희(2009)는 고등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북한이탈주민도 학력과 과거 직업 배경과 무관하게 거의 단순노동자로서 근무할 기회밖에 없어서 직업만족도와 소득수준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자로서는 그들이 선택할 직종 중에 유아교사직이 제외될 필요는 없지만 그들에게 자녀를 맡길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조심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연구자는 유아교육교원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제안으로 교육연한의 통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통일 후에 교원양성을 위한 연한의 통합은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토론자로서는 현재 남한의 연한과 관련된 교사양성 체제의 정비가 먼저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5. 설문조사

연구자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므로 연령, 학력, 경력, 직업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5574이어서 일관성 있는 측정이 어렵지 않겠나 조심스럽습니다.

- 연구자는 통일한국의 개념정의에 대한 동의정도를 볼 때 대학생들의 동의수준이 대학원이나 대학졸업보다 낮은 이유를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라고 추측하셨는데 그렇다면 고졸인 응답자가 대학재학생들보다 더 동의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일부의 통일교육방향에서 나타내었듯이 젊은 세대들

7) 김선희(2009). 인적자원개발론. 서현사. p. 332,333

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탓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 연구자는 원고에서 남북한의 유아교육기관 종사자 명칭을 비교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설문에서는 남한의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통일한국의 명칭으로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설문응답자들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무엇인지 모르고(북한이 탈주민을 제외하고)응답한 것이라면 명칭에 대한 선호를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보육교사의 양성기간을 1년이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고교졸업집단이 보육교사교육원출신 보육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토론자는 다르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실제 영유아교원이 1년제로 응답한 경우는 9명에 불과하였으며 오히려 북한 이탈주민들 19명이 1년제로 응답하였기 때문입니다.
- 영유아교사의 자질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학력에 따라 직업 및 신분에 따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다문화주의를 접한 대학생집단이 중요시 여긴 것은 교육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 북한 이탈청소년의 차세대 영유아교육전문가 양성이나 북한 이탈주민의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에 대해서 북한 이탈주민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볼 때 단순노동직에 집중된 그들의 소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 남북한 영유아교육현장의 교류 협력 지원에 대해서는 연령 경력 학력 직업 구분 없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필요성을 높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유아를 새터민에게 맡기는 것은 망설이지만 북한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볼 때 정부가 교육에 대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 의미 있는 협력지원을 실천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6. 마치며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안성에 소재한 하나원의 개원10주년 기념식에서 북한 이탈주민 문제는 인도주의와 인권문제, 우리 사회의 선진화와 복지문제, 통일 그리고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라는 세 가지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국가미래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때 현재의 급한 문제만 다루는 것보다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보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현장관은 북한의 IT 지원사업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악성코드를 삽입하고 남쪽으로 유입시킬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북한은 컴퓨터 생산은 진행하지 못해도 기술자 양성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IT 지원사업은 별도의 여러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일부 2009 통일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내 북한근로자 20~30대 여성들을 위한 영유아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200명 규모의 보육시설을 세우기로 하고 2008년 11월 제 211차 남북교류협력추진 협의회에서 의결하고 소요예산 9억을 확보⁸⁾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에 만약 남한의 유아교사가 진출하여 교육을 한다면 바람직한 교류사업이며 교육의 시험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자의 통일한국의 정의가 '점차적인 소통'이라면 우선적으로는 교재교구의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급학교의 교재교구는 정치적 가치관적 차이로 인해 교류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유아들을 위한 그림동화, 퍼즐, 적목, 미술활동 자료, 악기, 낱말카드, 수학활동 자료 등을 지원하는 것은 특정가치를 전달하는 문자로 된 정보가 드물어서 북한의 경계심을 덜 자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무엇보다 이미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과의 사람통일이 국토통일의 사전 작업이 되는 것을 잊지 말고 반편견교육이 그랬듯이 유아교육현장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 포럼을 주최하는 육아정책개발센터가 이 일에 더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라며 유아교육 현장을 통한 통일을 대비한 구체적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준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토론을 마칩니다.

8) 통일교육원(2009). 2009통일백서, 남북교류협력. p.101

다문화 사회에서의 영유아교원양성 토론

정 선 아 (한국유아교육학회)

미래유아교육학회 최민수 회장님의 통일한국의 영유아교원 양성과 재교육 제도 및 정책 방향 연구 발제는 다문화 사회의 다양성을 재차 인식하는데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문화주의 담론에 묻혀 문화와 인종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에 집중한 결과, 통일한국을 대비하여 같은 민족이지만 이질화된 문화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과 공생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를 간과하고 살아왔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저를 포함한 오늘 참석자들께서도 다문화주의 시대의 소수민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을 잊고 있었다는 것이 다문화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아이러니라는 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고수님의 발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저희들의 편견을 깨는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발표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최고수님의 노고에 사족을 단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성은 전무한 제가 토론을 맡은 것 역시 적절하지 않으므로, 다문화육아지원정책¹⁾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가 가졌던 몇 가지 논의점을 여기 참석하신 분들과 나누는데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저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교수님의 연구에 대한 의견, 다문화주의 시대의 주체인 새터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연구자의 관점에서

본 논문은 '과정으로 혹은 갑작스런 한 순간의 통일'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통일한국에서 영유아교원 양성과 재교육 제도 수립을 위한 현 남한과 북한의 양성과정과 제도의 차이를 상세하게 비교 분석하여 북한의 영유아교원 양성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발제논문은 새터민의 영유아교육현장 취입과 이들을 통한 통일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제안하고 있는 통일한국에서 영유아교원의 양성과 제도에 대한 정책은 현재 남한의 영유아교원 양성과정의 이원

1) 정선아(2009).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9(1), 279-298.

화, 교원의 낮은 지위(조사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체계적인 양성과 재교육 그리고 임금 및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등 우리가 향후 영유아교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이슈가 통일 한국에서도 그대로 전이될 수 있으나, 이는 통일 한국이 북한의 모든 제도와 정책을 남한의 제도와 정책으로 흡수 통합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관점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통일한국의 영유아교원양성과 관련된 제도는 통일한국의 교육이념, 남북교육제도 통합의 원칙과 방향 및 전략적 과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절차를 논의해나가는 것(윤종혁, 이찬희, 이석희, 신효숙, 박영은, 2007)이 좀 더 실현 가능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한국에 대한 영유아교원의 기대는 무엇이며, 어떠한 가치가 지켜지고, 어떠한 가치가 교차·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었다면 더욱 의미있는 연구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한국에서 영유아교육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통일시대에 우리의 영유아를 어떻게 자라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영유아교육과보육의 목적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영유아교원은 어떻게 양성해갈 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통일시대 육아지원의 방향도 함께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통일한국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안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학문적 논의가 저희 영유아교육 연구자들의 당면 연구 과제인 것 같습니다.

2. 다문화시대의 주체로서 새터민(탈북주민)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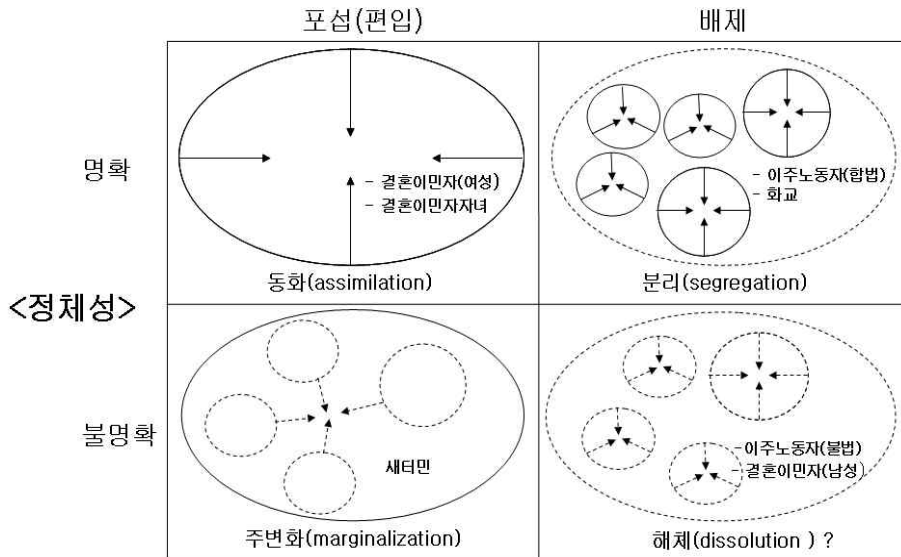
발제 논문에서는 새터민을 통일한국의 기능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들을 다문화시대의 주체로서 바라보는 것도 통일한국의 시대에 대한 우리의 준비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새터민 역시 다문화시대의 다문화의 속성을 지닌 집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전영평, 2008). ‘다문화시대’에 대한 광의의 정의는 ‘다문화’의 속성을 한 국가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자 세력이 표출하는 다양한 문화적 특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문화’의 의미를 외국인 소수자의 수용과 적응 분야에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결혼이주배우자의 경우, 그 구성이 매우 이질적이며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계층에서 결혼을 매개로 이주하는 특성을 가진 관계로 집단적 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결혼이주배우자와 외국인노동자 모두 다민족이나,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집단적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한 다문화시대를 살고 있는 주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새터민은 오히려

조직력, 정체성, 삶의 방식 등의 측면에서 결혼이주배우자들이나 외국인노동자들에 비해 훨씬 강력한 수준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이는 집단이므로, 다문화시대는 새터민과 같은 소수자 집단의 하위문화들이 어울리는 시대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관점입니다. 새터민은 동성애자 집단, AIDS 환자 집단, 탈북자 집단,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집단, 양심적병역거부자 집단, 장애유형별 장애인 집단, 화교집단, 성매매여성집단, 납북자가족집단, 노숙자옹호 집단, 특수부대근무자 집단 등과 같은 소수자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문화적 정체성이 높을 것 같은 새터민이 소수자집단 가운데 집단정체성이 강하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은 특수성을 지닌 집단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원숙연, 2008). 새터민은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왔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출신배경과 탈출동기, 우려되는 불이익으로 인해 상호 융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적응 초기에 새터민들간 상호교류를 기피하고 남한주민과 어울리려는 경향을 보이는 등 새터민 사이에 명확하고 강한 집단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에게 부여된 외부적 정체성도 다소 유동적입니다. 새터민을 대하는 다수집단(일반국민)의 태도 역시 양가적이어서 동등하고 동질적이라고 보기 보다는 민족 및 인권적 차원에서의 동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새터민에게 투사되어 나타나 의심과 불신이 혼재된 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시선 역시 이들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데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수자집단 역시 매우 다양하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어떠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할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소수집단의 주류집단과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순응전략(Berry, 1997 원숙연 재인용)이 매우 다양하다는 연구는 이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정 사회의 소수집단이 주류집단과의 접촉이나 관계유지에 대해 긍정적인가 또는 부정적인가와 소수집단 구성원이 자신들의 본연의 정체성과 특징을 유지하는데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를 중심으로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통합(integration), 그리고 주변화(marginalization)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림 1). 동화전략은 비-주류집단이 자신들의 정체성유지에는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타(주류)문화에 대한 수용에는 적극적인 경우, 분리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에 집착하면서 타(주류)문화와의 접촉에 소극적인 경우, 통합은 자신들의 문화적정체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타(주류)문화와의 접촉에도 적극적인 경우, 마지막으로 주변화는 비-주류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유지나 타(주류)문화와의 접촉 모두에 대해 소극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정책방향>



[그림 1] 다문화시대 소수민의 정체성과 이들에 대한 정책 방향

출처: 원숙연(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새터민의 경우 정부지원은 적극적인 편입(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북한 자격증은 전부 혹은 부분인정이 되고 있음)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여성결혼이민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약화된 측면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새터민은 동화와는 다른 주변화 유형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민족으로서 또는 인권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은 공유하지만 새터민에 대해 다수집단이 갖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가 일정부분 개입된 결과라고 합니다. 관념적 차원에서 새터민의 사회정착을 위한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피해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반대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윤인진, 2004; 정병호, 2004, 재인용 원숙연, 2008). 이러한 방향성은 일종의 관대한 다문화주의로 발현되고 적극적인 동화보다는 다수집단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주변화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터민의 주변화는 발제자의 논문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터민의 영유아교육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에 35.7% 정도만이 신뢰하는 반면, 대다수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새터민들의 영유아교육 전문가 취업에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주변화에 기여하고 있는 양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나가며

새터민을 비롯한 다문화 구성원들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창조해 가야하는 문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덕목 혹은 이상적 가치라는 다문화주의의 편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개별 문화가 동질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질적 요소가 서로 경합하는 역동적인 것입니다. 다문화적 가치는 공동체의 가치와 정체성을 파괴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를 파편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하거나, 문화적 차이를 주장하고 인정과 지원을 요구하는 인정의 정치나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서서 또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낭만적 태도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도구적 관심이 아니라 “차이의 존중을 통해 새롭게 구성해내는 새로운 시민문화의 창출”(한건수, 2007)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교육 역시 한 사회 내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양한 관점의 증진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소수자 집단을 인정하여 통합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동등한 조건을 부여하여 수용 통합하고, 동시에 문화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문화적 통합의 단계로 발전될 것이고(이종범, 2008),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통일한국에 대비할 수 있는 문화시민으로 성장해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 원숙연 (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2(3), 29-49.
- 윤종혁, 이찬희, 이석희, 신호숙, 박영은 (2007). 통일 시대에 대비한 북한 교육 지원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종범 (2008). 특별편집인의 서문: '다문화 시대의 소수자 행정과 정책. 한국행정학보, 42(3), 1-7.
- 전영평 (2008).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운동과 소수자 행정: 담론과 과제. 한국행정학보, 42(3), 9-27.
- 한건수 (2007). "비판적 다문화주의: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모색을 위한 인류학적 성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편, 『다문화사회의 이해』. 서울: 동녘.



육아정책개발센터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Tel. 02-398-7700 **Fax.** 02-730-3313